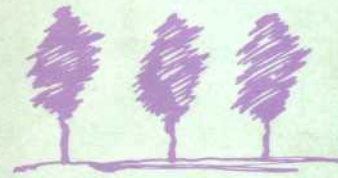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5

인권하루소식

합본 V 호
(401호~500호)



1996. 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 호 1996. 2

인권정보자료실
R1.1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제401호 - 제414호)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중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의 공식적인 첫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코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씨가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코마라스와미씨는 생존해있는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17일 입국하여 18일 정부대표와 만난다. 19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하여'란 제목의 강연을 하고, 군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만날 계획이며, 한국에서의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미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방한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일본의 도즈카 변호사는 "일본이 아닌 남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방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남북한과 일본정부 모두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처음이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방문자인 한국과 북한의 정부와 국민이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계기로 정신대 문제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지원이 결국 일본정부의 대응 수준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적극적 관심과 보도를 당부하였다.

그는 이 조사활동을 토대로 올해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96년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전쟁중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린다차베스씨도 23일 5일간의 일정으로 군위안부 조사활동을 위해 방한한다. 차베스씨의 방한은 제46차 인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 대학구내 진입 '인혁당' 추모비 철거 영남대, 경북대 항의시위

경찰이 대학구내까지 병력을 투입하여 추모비를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도청은 11일 새벽 3시경 대구의 경북대와 경북 영천의 영남대학교 두곳에 경찰을 투입하였다. 경찰은 이날 영남대에 경찰 5개중대와 포크레인 2대, 페퍼코그 2대, 소방차등을 동원하여 고 서도원, 고 도예중, 고 송상진(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75년 4월9일 사형됨)씨등 '4.9 통일열사 추모비'를 철거했다. 이 추모비는 총학생회와 민주동맹, 재야인사들이 힘을 모아 지

난 4월8일 영남대 사범대 앞에 세운 것이다.

경찰은 경북대학교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고 이재문(남민전 사건으로 79년10월 구속, 81년 10월 옥사), 고 여정남(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75년 4월9일 사형됨)씨 추모비를 철거하려 했으나, 사전에 경찰투입 사실을 알았던 총학생회측이 추모비를 빼돌려 기단과 안내판등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영남대와 경북대 학생들은 이날 경찰서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도로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규탄 집회를 갖는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의 시위로 장운영(20)씨등 학생 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대학구내에 세워진 추모비가 파괴된 것은 천안 단국대에 세워진 최덕수(88년 분신)씨의 추모비가 90년 초 파괴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74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진보적인 인사들을 친북한 반국가 전위조직을 결성했다며 조작한 사건으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75년 4월9일 대법원 사형판결 바로 다음날 8명을 사형에 처했다.

【대구=장은희】

<제보를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나 인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소식이나 행사와 인물 동정에 대한 제보를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제보에 의해 보다 알찬 신문이 될 것입니다.
연락주실 때는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이나 전자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7회)

형사소송법 I

강사: 차병직(변호사)

일시: 5월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해외 진출 한국기업 "가장 악명높은 투자가"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지적

'하루 15-16시간 노동, 한달에 한번 밖에 없는 휴일, 인간 이하의 대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노사분규, 군대식 규율, 협박과 폭력, 야간근무수당 미지급, 잦은 성폭행...' 근면하다는 한국인의 얼굴은 이제 해외에서 위와같은 일들을 다반사로 하는 악명높은 투자가로 비춰진다.

11일 오후 2시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를 주제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등)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전망'의 발제를 맡은 강용중(서울대 경제학 강사)씨는 "한국자본은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파장으로 국내에서 자본축적의 조건이 어려워져서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었다"며 90년 이후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정도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해외 진출 한국자본의 특징에 대해 스페셜리즘 중심 아시아와 북미지역에 편중 스투자규모의 영세성과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를 들었다. 그는 한국의 자본이 현지에서 심각한 노동통제를 행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처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의 강화, 노조운동의 억제로서 표현되는 노동통제가 가능한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지 노동자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으며 천박한 제국주의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자본의 해외진출이 계속 늘어날 추세이며 이는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이 수출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활동방향과 과제'의 발제자인 이정옥(효성 가톨릭대)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조사연구활동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홍보와 적용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문화사회적 컨설팅 시스템의 확립 △해외투자기업의 행동수칙 및 법제화를 위한 노력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 실상을 발표한 찬 카와이(Chan Ka Wai, 홍콩 Christian Industrial Committee 중국조사담당)씨는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투자가"라고 말하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안전의 위협, 구타·성폭행 등 한국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서 중국의 자주노조(autonomous trade union)를 지원하는 활동에 국제인권노동단체들이 나설 것을 호소했다.

◆ 동 정 ◆

□ 서울대 축제기간인 16일-19일에 유가협은 도서관 앞에서, 민가협은 학생회관 앞에서 장터를 운영한다.

□ 「외국인노동자피난처」김재오(30)소장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간 필리핀노동자에 관한 현지조사활동(4월 20일-5월 9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 행사안내 ○

- 불교인권상 수상식 및 한상범 교수 「인권문제입문」 출판기념회
 - 일 시: 12일 오후 6시/· 장 소: 조계종 총무원 강당
 - 주 최: 불교인권위원회(☎745-1852)
- 박창희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후원의 밤
 - 일 시: 12일 오전 12시-오후11시/
 - 장 소: 외국어대학교 앞 외대호프
 - 주 최: 박창희교수 석방을 위한 외대공동대책위(☎961-4502)
- '긴급조치 9호시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 행사 「1975년에서 1995년으로」
 - 일 시: 12일 오후 5시-8시/·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주 최: '긴급조치 9호시대' 반독재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797-9402)
- 민주노조사수 기금마련 일일호프
 - 일 시: 12-13일
 - 장 소: 한양대 앞 한양호프(☎ 295-1791)
 - 주 최: 서울지하철공사노조
- 5·18민중항쟁 15주년기념 및 학살책임자 기소 촉구 국민대회
 - 일 시: 13일 오후 2시-7시/· 장 소: 장충단공원
 - 주 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계승국민위원회(☎747-4364)
 - 주 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스승의 날 기념 교육문화 한마당 95' 여화동동 우리들'
 - 일 시: 13일 오후 5시-8시
 - 장 소: 고려대 노천극장
 - 주 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시민모임 등 5개단체(☎ 675-6181)
- 민족회의 하루주점
 - 일 시: 13일 오후 2시-11시
 - 장 소: 대학로 싸스퀘어 맥주타운 (해화역 1번출구, 중원빌딩 4층 ☎ 3672-5423)
 - 주 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해방 50주년기념 학술대회-한반도통일국가의 체제구상(제1차 정치부문)
 - 일 시: 13일 오전 10시30분-오후6시
 -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 최: 학술단체협의회(☎ 271-0491), 한겨레신문사
-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10주년기념식 및 공연
 - 일 시: 13일 오후 3시-5시30분/· 장 소: 강남 봉은사
 - 내 용: 1부 기념식/2부 기념공연:백두산
 - 문 의: ☎ 730-7658
- 조성만열사 7주기 추모식
 - 일 시: 14일 오후 7시/· 장 소: 명동성당
- 열쇠따르릉 전화친구 개통식
 - 일 시: 15일 오전 11시/· 장 소: 부스러기 선교회 사무실
 - 주 최: 부스러기 선교회(☎ 365-1265)
- 최덕수열사 7주기 추모식
 - 일 시: 18일 오후 5시/· 장 소: 천안역 광장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북한, 총수감자 8백명중,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엠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 대표단이 북한의 법개정과 양심수 문제를 토론했기 위해 4월26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다. 엠네스티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엠네스티가 12일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북한의 「인권조사연구소」(Institute for the Research of Human Rights)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인권상황에 관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대표단은 조사활동 중 북한의 사법·외무관련 책임자와 법조계 인사를 만났으며 사리원 근처의 교화센터(교도소에 해당)를 방문했다. 북한 당국자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리원을 포함하여 3곳에 교화센터(교도소에 해당)가 있으며,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8백에서 1천여명이고 그 중 2백40여명이 '반국가'행위로 인한 수감자이다. 북한정부는 대부분의 반국가

의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는 국제적인 책임성과 국제인권단체 등 독립적인 감시자의 접근 허용 등 개방성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의 전과정을 통해 엠네스티는 북한의 법률체계에 대해 광범위한 측면을 토론했을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명료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기 위해 최근 도입된 형사절차 수정조항을 보고받았는데, 예를 들어 사형선고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높였고, 반국가 범죄는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이 수정조항과 대표단이 요청한 다른 법률의 전문이 입수되는대로 엠네스티는 상세한 논평을 할 예정이다. 1992년에 엠네스티는 반국가행위에 관한 범죄요건이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구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북한 당국자는 엠네스티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양심수의 많은 수가 실제로 구금된 일이 없으며,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의 실제 소계를 조사하기에 충분치 않은 정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당국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막연한 소문에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씨 분신 노조행사 참가 저지당하자 격분

울산 현대자동차의 해고노동자 양봉수(28, 의장2부 노조대의원)씨가 12일 오후 4시40분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분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민중노총 해고자특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되려던 노조 공동소위원회 2기 발대식에 참가하려고 동료해고자 3명과 함께 회사를 찾아가셨으나, 회사 경비원들이 "해고자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저지,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양씨는 "노조 대의원이 조합원들의 행사에 참가하려는 걸 왜 막느냐"며 격분, 준비해간 신너를 은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한다.

분신 직후 양씨는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울산 해성병원을 거쳐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동자 1천5백여명은 밤늦도록 회사 정문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분신한 양씨는 지난 2월 회사가 노조와 상의없이 작업물량을 늘리는데 항의하는 표시로 생산라인을 일시정지시켰다가 해고돼 현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내놓고 있다.

한편, 회사측이 해고를 이유로 양씨의 회사출입을 막은 행위는 "해고되었다고 해도 해고의 효력을 다룰 때는 노조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처사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7회)

형사소송법 I

강사: 차병직(변호사)

일시: 5월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5.18전 이장 압력

지난 2월 24일 위암으로 사망한 출소 장기수 윤기남씨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기세문씨등 2명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광주시청이 윤씨의 묘지를 옮길 것을 가족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의 묘지는 광주 5.18 묘역 근처인 제3묘역 안에 설치되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지역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윤씨의 묘지를 5.18주간 이전에 이장하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광주시청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가족들은 광주시청 쪽의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김미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씨 만나

제주교구의 김창열 주교와 양영수 신부,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박윤정 신부, 교도사목담당인 김학록 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오창래 사무국장 등은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장형씨를 12일 접견했다. 이장형씨는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된 후 67일동안 이근안씨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 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된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위한 활동을 펴왔다.

시위통제선 철폐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변호사는 11일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시청 15주년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의식해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 진관, 불교인권위) 제4회 인권상 시상식이 12일 조계사 총무원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불교인권상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수상했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93년 윤금씨 살해사건을

제기로 「발족되어 지금까지 6개지역에 미군범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미군범죄사례 상담·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3부행사로 한상범(동국대 법대)교수가 그동안 인권에 관해 쓴 글을 모아 펴낸 「인권문제입문」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특별보고관 방한 연기

일본군 중군위안부 조사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유엔 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디카 코마라스와미씨가 갑자기 병을 앓게되어 그의 방문이 7월로 연기되었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 인권간행물 ◆

- 「시민과 변호사」 5월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 주요내용-「대」사법개혁을 갈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대위(☎ 765-2010)
 - 주요내용-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이원재/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모음 등. 73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8개 단체(☎ 522-7284)
 - 주요내용-서문/제6조 노동권/제7조 노동조건/제9조 사회보장/제10조 여성, 가정등의 보호/제11조 인간다운 생활권/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5조 문화적 권리 등. 96쪽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전국민주노동준비위, 참여연대(☎ 765-2010)
 - 주요내용-연금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혁 방안에 관한 시론-김연명/사립학교 교원연금-최기원/농어민 연금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김성철 등. 59쪽
- 95년 입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승리를 위한 실천·교육지침-민주노동준비위(☎ 765-2010)
 - 주요내용-사회개혁투쟁이란 무엇인가?/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비판과 대안/정부 '임금가이드라인'비판 등. 130쪽
- 민주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민주노동준비위(☎ 765-2010)
 - 주요내용-민주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재은/세계개혁과 노동조합-김유선. 79쪽.
- 95년 입단투와 사회개혁투쟁 지침-민주노동준비위(☎ 765-2010)
 - 주요내용-입단투와 사회개혁투쟁 기본방침/주요 노동통계. 238쪽
- 「베를」 85호-한국 여성의 전화(☎ 269-2962)
 - 주요내용-폭력문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II-곽금주/95년 1/4분기 상담통계 등. 15쪽
- 여성상담사례집 2-한국여성의전화(☎ 269-2962). 126쪽
- 방과후 아이들: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한국여성단체연합(☎ 274-2883)
 - 주요내용-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김재인/보육시책방향-방과후 아동보육관련-배병준 등. 64쪽

<제보를 받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제보에 의해 보다 알찬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실 때는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이나 전자우편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희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투위원회 부장 최홍재(28, 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본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부인 신미혜씨에 의하면 이날 새벽 6시경 경찰청 형사들 4명이 긴급구속장을 보이며, 집에 들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최씨를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최씨 외에도 고대생 4명, 건국대생 1명, 군인 3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사건과 관계

된 혐의를 잡고 있다. 특히 93년도 서총련 조총위원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씨의 연행이 8.15를 앞두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며 최씨와 연행된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 부산시경은 15일 새벽 5시 이은영씨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긴급구속했다. 부산시경은 「「빛나는 전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노동계에 학습·유포한 혐의

로 긴급구속」했고, 이들 외에도 5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종철 출판사의 맑스엥겔스 전집, 디스켓, 자료집 「맥박」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지역 연행자 명단: 최홍재(고려대 신방과 졸업), 최호현, 강현우, 윤성문(의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며 최씨와 연행된 학생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연행자 명단: 이은영(동아대 국문91 졸), 이은정(사회91), 조수진(사회92), 최문규(법학90), 한수환(사회92, 군복무중), 최광은(부산대 공우주90 졸), 정지혜(사회90), 임은기(행정91, 군복무중), 안현아(부산여대 교육93), 박지순(부산여전92 졸), 이상미(91 졸), 김혜진(93 졸)등

현대자 노동자 텐트농성

양봉수씨 분신사태 항의

12일 노조행사에 참가하려다 저지당하자 이에 격분, 분신한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28, 의장2부노조대의원)씨는 현재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15일 현재 양씨는 전신 3도의 화상(75%)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한편, 울산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12일 밤 「양봉수 동지분신 대책위원회」를 결성,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13일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서 조합원 6백여명은 규탄집회를 가졌다. 또한 노조원들은 승용차 1,2부를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들어

갔고 점차 파업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울산해고노동자협회」도 정문 앞에서 텐트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양봉수분신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울산현대자동차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준) 해고자특위」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현장작업강도의 강화 철폐 △책임자 엄중처벌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노동부장관 사퇴를 요구했으며 6일 정오에 계동 현대사옥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철거테러 공동 대응키로 고소·고발운동등 펼쳐

「성폭력 테러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과 철거용역 해체를 위한 공동대책본

부」(대표남경남의 2인, 공대본)는 15일 오전10시 종로성당에서 결성식을 갖고 책임자처벌과 용역반해체를 촉구했다. 공대본은 이날 사업보고에서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운동 △백만인 서명운동 △철거용역반 해체를 위한 공청회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대본은 16일 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이후 서울지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공대본은 「전국민민연합(준)」, 「전국철거민연합」등 5개 단체로 구성되어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등 6개 단체가 후원하고 있다.

윤기남씨 묘 강제이장 광주시청, 가족등의 없이

광주시청은 15일 오전, 비전향 장기수 고 윤기남씨의 묘소를 파헤쳐 망월동 제8묘역으로 강제이장했다. 윤씨의 가족들에 따르면 광주시청 직원들이 12일 찾아와 「14일까지 묘지를 이장하지 않으면 시청에서 이장하겠다」고 말한 후 이날 이장했다고 한다.

● 공판 안내 ●

- 5월 17일(수) 서중연, 국보법, 오전10시30분,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박치현, 집시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이진영, 국보법, 오후3시, 서울형사 1단독, 424호
- 5월 18일(목) 서선행, 폭력,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2부, 422호
- 5월 19일(금) 김현준(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3부, 311호 조두현,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합의10부, 318호 신광수,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2부, 418호 신용섭(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방치된 어린이 전화친구 부스리기선교회, 개통식

「부스리기선교회」(공동대표 김인숙등 3명)는 15일 오전 11시 기사선 부스리기선교회 사무실에서 '열쇠따르릉 전화친구'(전화친구) 개통식을 가졌다.

전화친구의 윤경옥 간사(27세)는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방치된 어린이들은 절도, 본드흡입, 성폭행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놓여있다"며 "전화친구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목적을 밝혔다.

부스리기선교회는 현재 1차전화 상담원을 교육중이며 앞으로 전화친구를 통해 도와주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다. 따르릉 전화친구의 전화번호는 365-1123, 상담시간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10시30분. 일요일은 쉰다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중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배변조사 자격 박탈 진정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는 13일 변호사 배태연씨를 여성회통과 아내구타등의 이유로 변호사직 박탈을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했다.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배씨는 8년간 장아무개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에게 육살과 구타등 학대를 해왔다.

배씨는 93년에도 여대생 채용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주/간/인/권/호/름

(95년5월8일-14일)

<8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기소촉구 선언문'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재야단체 명동성당서 집회/ 대검 공안부, 수배중인 민주노총준비위 간부 9명에 검거명/ 「유엔범죄회의」 테러저지, 여성·어린이에 대한 폭력등 저지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내용의 10개 결의안 채택/ 중국공산당 정치국, 보안경제령 북경세계여성대회까지 연장키로

<9일>

국제적십자자연맹 「세계재해보고서」, 56건의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항민 2천6백만명 발생/ 서울지검, 15일부터 청사안 변호인접견실 설치/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국선변호인 진숙제, 집중심리제 활성화 운영 등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시 밀린 임금과 산업재해등 반드시 해결해준 뒤 강제출국시키도록 지시/ 서울경찰청 시위에 경찰통제선설정, 운용 방침 밝혀/ 이름, 나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던 최석진(20)씨 대법원서 무죄확정 판결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 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투입 인혁당 회생자 추모미 강제철폐/ 서울지검 공안1부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미국인 피터슨 목사 참고인 조사

<12일>

국내 최초의 산업재해 전문병원 '재중병원' 건립 주민반대로 난항/ 긴급조치 9호 선포 반독재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행사/ 대법원 민사1부, 출퇴근 불편등을 이유로 회사 전보명령을 거부하다 해고된 정대현(장에인)씨에게 해고무효판결/ 대법원 형사1부 김성오씨 상고심에서 "채포당시 범죄사실 요지, 채포이유,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지 않았고"며 무죄 선고/ 서울지법 형사9단독 아현동가스폭발 사고 관련자 3명에 금고 선고/ 울산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씨 분신, 중태

<13일>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국 부산 해운대 백사장서 성대하게 개최/ 전국연합등 전국에서 광주 책임자 기소촉구 국민대회 가져

<14일>

광주민중항쟁 15돌 맞아 망원동 5·18묘역 2천여명 참배

<해설>

우리는 요즘 곳곳에서 그전과는 다른 인권의 침해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그전에도 없던 대학내의 추모비를 경찰이 강제철거하더니 이제는 고인의 묘지마저 파헤쳤다. 1백명이 넘는 대구참사는 축소수사로 빨리 덮더니 이전의 활동을 문제삼아 학생들을 대거 구속하고, 수배된 노조 간부들을 긴급히 구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5.18을 앞두고 있고,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입투와 지지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일 것이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정권은 다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인권은 언제나 항상 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권의 편의에 의해 죄우리는 인권저대를 가진 정권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조치가 통학여건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외적인 문제이고, 상색국교에 통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시킨 조치가 통학여건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밀리 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서울고법의 선고 결과에도 불구하고 6월중에 서울영상집단의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시사회와 사진전, 모금공연, 책자발간, 순회 세미나, 주말학교, 방학캠프등을 개최하며 여론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두밀분교 24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놓여온 소규모 학교 통

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28일자로 폐교조치하고 상색국교에 통합시킨데 반발,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냈다. 두밀리 주민들은 학생들을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올 새학기부터 상색국교에 등교시키고 있다.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하상 교수(고려대 경영학)는 "한국기업은 안전에 대한 사후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이익을 공적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 권 / 어 / 록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강제하여 전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이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모독이 될 뿐이다

— 홍세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95년 창작과 비평사

5.18 광주민중항쟁 15돌 기념 행사 일정

일자	행사명	시간·장소
16일(화)	국제 심포지움	오후 2시, 금남로 금곡회관
	5.18 노동열사 추모제	오후 6시30분, YMCA
17일(수)	분향소 설치	18일까지 상무관
	특별전도제	오전 10시, 망월동
	거리행렬극	오후 3시, 도청앞
18일(목)	5.18 전야제	오후 6시, 도청앞
	5.18 추모제	오전 10시, 망월동
	추모법회 및 천도제	오전 12시, 도청앞
	기념식 및 국민대회	오후 3시, 한빛교회
19일(금)	추모미사	오후 7시30분, 남동성당
	거리극	오후 6시, 가톨릭센터 앞
20일(토)	5월 영화제	오후 1시, 가톨릭센터
	5월 여성제	오후 2시, YMCA
21일(일)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 및 차량행진	오후 2시, 무등경기장-도청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 촉구 노동자 대회	오전 11시, 광주공원
24일(수)	기소촉구 국민대회	오후 6시, 광주공원
26일(금)	5월 문학의 밤	오후 7시, 가톨릭센터

* 5.18 미술·사진 전시회, 16-18일, 금남로
* 책임자 기소촉구 캠페인, 매주 수, 금요일 오후 6시, 광주우체국 앞
* 문의전화: ☎ 062-224-5518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증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1일-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인 허승대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자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 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데 반해 정부 관계자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원노조는 상식인데 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문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다. 한국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 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과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법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4월18일과 19일의 해외노동자에 대한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제3차 개입금지,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도 황실수설과 증언부언으로 일관했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내 민간단체 대표들은 전했다.

반면, 민간단체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슬라이드 상영까지 하면서 설득력있게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전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슬라이드 중 특히 지난해 전지협 노동자들의 무릎 꿇려 연행하는 장면 등을 보며 위원들은 경악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위원회의 논평을 입수하는 즉시, 정부와 민간단체 보고서의 내용과 논평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국가에 '원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권리(7, 8, 9, 10조)를 상세히 규정함과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9조 2항, 19, 20, 21조).

가족은 어린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자연적 환경이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7조 1항)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가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관련 민간단체에서 직접 상담한 케이스에 의하면 호적을 갖지 못해 취학통지서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대부분 어머니가 전직 유락여성인 경우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미혼모의 출산인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계기관에 가서 정황을 진술하고 엄마의 성을 따 입적시켜야 하나 본인들의 무지(어머니 자신이 호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나 관에 대한 두려움, 굴욕감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다.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부부가 낳은 아이이나 그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적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입양기관 등에 인도된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을 따거나 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보호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름'없는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껌팔이나 구걸등에 내몰리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관계기관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유도·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일선 상담자는 말했다.

가정환경을 잃은 아이들

이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순수(?)한 가정 환경상실 어린이의 비율은 아주 적으며,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의 15%만이 부모사망의 이유에서다). 특히, 농어촌·빈민·공단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아 어린이시절 빈곤 가정에서 방치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그 경험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방치된 아이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일선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친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요청이 없는 한 가족 내 아동학대에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신고제나 치료기관, 쉼터마련 등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오늘은 광주민중항쟁 15돌>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제인권 잣대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보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대신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 첫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인권협은 올연초부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확정짓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종현 변호사가 실행위원장을, 인권협 소속단체들의 중견 활동가들이 실무를 맡았다.

인권주간중인 12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동안 열릴 이 행사에는 외국의 저명한 국보법 연구자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시대의 국보법과 인간의 기본권 △세계국보법 현황과 역사적 현황 △아태지역의 국보법과 인권, △해방 50주년과 한국의 인권운동 △21세기 인간안보 시대의 준비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워크샵 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행사 최종일인 12월9일에는 전세계 국보법 폐지(개정)와 탈냉전 21세기 인간안보를 향한 '서울 인권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 개념이다. 개발이 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이 중시되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가 또는 영토 안보로 좁게 해석돼왔던 안보개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로 강조점이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등 8.15 통일민중공동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도 '국보법 폐기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김무용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엠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엠네스티)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연행된 김무용(34, 방통대 역사학 강사)씨를 양심수로 선정, 김씨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김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고 양심수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전쟁시기의 빨치산 활동을 다룬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운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30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엠네스티는 "4월 6일 이창복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95년 현재 한국에는 3백70여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으며 그중 80%가 국가보안법으로 갇힌 이들과 함께 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7회)

형사소송법 II

강사: 차병직(변호사)
일시: 5월20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가입팩스 요금이 올라 팩스 발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경찰,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 고려대생 7명등

지난 15일 부산대등 4개 대 학생 15명을 구속했던 부산시경찰청은 17일, 단순 혐의자 최광은(부산대)씨등 6명을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부산시경찰청은 16일 부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부산여전등 4개대 출신으로 구성된 이적단체 '빛나는 전망'을 적발하여 15명을 연행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5월 16일자 참조). 현재 이 사건으로 균인을 포함해 10명(부산시경 5명, 기사사 5명)이 구속되어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구속 이유는 93년 9월 '부산 민중회의 학생위원회'의 후신인 '빛나는 전망'을 결성하고 기관지 <맥박>을 통해 맑스주의를 선전하고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다. 부산시경은 2차 검거대상자들을 계속 추적중이나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중 우수현(부산대 독문 92학번)씨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것으로 18일 오후 확인되었다.

최규하씨 면담 거절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

여성계 2백인이 지난 4월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보낸 면담요청에 대해 최씨는 8일 담신을 보내 "충정은 이해하나,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면담을 거절했다. 이에 면담신청자들은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면담은 물론 증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 전대통령에게 "12·12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을 요청한 박용길, 이효재, 박순경씨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지난 94년 11월 '12·12 군사반란 및 내란자 기소추구를 위한 여성 2백인 선언'을 발표, 전두환·노태우씨등 12·12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바로잡습니다> 18일자 AI 김무용씨 기사중 '앤네스티가 발표한 3백70여명'은 '양심수'가 아니라 '정치적 수인(정치범)'으로 정정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팩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벽에 배달되는 관계로 꼭 밤에 팩스를 수신상태로 해 주십시오.

○ 행사안내 ○

□ LG그룹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투쟁선포식
·일 시: 5월19일 오전 12시-오후3시
·장 소: LG그룹본사 쌍둥이 빌딩 중앙현관 앞
·주 최: LG그룹해고노동자복지실천협의회 (☎ 784-6037)

□ 지방자치제와 장애인복지 정책 발표회 및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정책자료집 출판기념회
·일 시: 5월19일 오후 3시-5시
·장 소: 프레스엔타 19층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 521-5364)

□ 「문국진을 생각하는 사람들」, 창집
·일 시: 5월19·20일
·장 소: 가톨릭대 진리관 4강의실
·주 최: 가톨릭대 동아리 아람

□ 이준순 열사 4주기 추모식
·일 시: 5월21일 오전 12시
·장 소: 광주 망월동 5·18묘역

□ 조성식 열사 6주기 추모식
·일 시: 5월21일 오전 12시
·장 소: 마석 모란공원

□ 원진레이온 고점자씨 2주기 추모식
·일 시: 5월21일 오전 12시
·장 소: 마석 모란공원
·주 최: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 (☎ 0346-63-3645)

□ 김귀정 열사 4주기 추모식 및 문화제
·일 시: 5월25일 2시, 6시
·장 소: 성균관대 금잔디광장
·주 최: 김귀정추모사업회(☎ 760-7381)

□ 전문직여성들의 국제활동강화훈련
·일 시: 5월22일-6월2일 오전8시50분-오후5시
·장 소: 한국여성개발원 기숙사 강당
·주 최: 한국여성개발원 (☎ 365-0071, 국제협력부)
·내 용: 국제관계론/국제기구론/모의 국제회의 등
·참가비:3만원

◆ 동 정 ◆

□ 쉽게 들을 수 없었던 노동가요들을 이제 「노동가요 공식음반 1·2집」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음반은 지금 전국레코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중 일부는 민주노총 건설기금으로 사용된다.(☎ 326-1275)

□ 고문후유증으로 지난 1월 29일 여섯번째 입원했던 문국진씨가 13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문씨는 그동안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 민중당계원이 19일 오후6시에 집들이를 한다. 민중당계원은 지난 9일 새 가계를 얻어 이사했다. 전화 969-8726.

<'광주'는 계속되고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 예고

김대통령, "한통노조 국가전복 저의" 운운 몰상식 드러내
19일, 현총련 노동자 800여명 연행돼

정부의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방침으로 올해도 노동권이 심각히 훼손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은 19일 새벽 3시40분, 울산 현대자동차에 전경등을 투입, 농성중인 노동자 3백여명을 모두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양봉수씨 분신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상범씨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공동대표 2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시위로 8백명 연행돼 이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소속 노조원들의 연행시위가 계속되었다. 밤늦게까지 현대자동차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들은 △경찰의 무력진압 규탄 △해고자 원직복직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경찰은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맞서 이날 오후5시 현재 8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적극가담, 단순가담, 업무방해등으로 분류하여 구속, 훈방, 불구속 처리할 방침이어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신대책위원회 간부 12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

총련은 20일 오후 3시30분 일산해수욕장에서 경찰력 투입과 무차별 연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부산양산지역 노조공동투쟁본부」도 19일 오후7시30분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조선노협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다. 또, 현총련도 20일 고려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

다. 한국통신노조 냉각기간 제안 19일 오후 2시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은 대의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회사측에 "21일부터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 기간동안 △노조의 단체행동 유보 △회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등 일체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의원은 "쟁의 발생절의와 공노대 가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등을 결의했다.

한국통신노조는 '25일 정오까지 징계철회 및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공사와 정부당국이 대화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며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정부, 강경대응 방침 천명 한편, 노동부, 대검찰청등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은 19일 오후 대책을 협의

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 준비위, 현총련, 한총련등 9개 단체 간부들이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 사태에 대해 깊이 개입한 사실을 개입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즉시 이들을 구속할 나설 예정이어서 대량구속 사태가 우려된다. 또, 한국통신측도 19일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준비위측은 임무 시기를 앞당겨 5월말로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국제언론인협회(IPI) 한 국측 임원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한국통신노조가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7회)형사소송법 II

강사: 차병직(변호사)
일시: 5월20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낮12시30분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5개 정책 과제 제시 장애인 단체들, 복지 원칙도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대표 조일묵의 7인, 장애인공동대책)는 지자체 선거를 맞아 '장애인 복지정책 7개 원칙과 45개 주요 정책과제'를 19일 오후 1시 프레스엔타에서 발표했다.

조일묵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동대책은 지난 1년간 지방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1백72쪽에 이르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은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와 교육·의료·고용·복지 서비스등 6개에 이르는 부문별 과제, 서울·부산·광주 등 8개 지역의 지역별 과제를 수록하고 있다(다음호에 45개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장애인공동대책은 앞으로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에게 과제집을 배포하여 그들의 공약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에게 후보자중 10%를 장애인으로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제재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엄격성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최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어온 조항이다. 올해 들어 서만도 부산지법의 박태법 판사(현 인천지법), 서울지법의 이신섭, 이우근 부장판사가 이 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의견표명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1년이상을 끌어온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아이들이었다. 1년을 넘겨 마을회관에서 어머니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으면서도 불만보다는 자신들의 학교에서 수업받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아이들. 그러나 이 재판결과가 얼마나 두밀리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내려진 것인지를 한 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한 그 재판 분위기를 과연 아이들의 입장이 반영되었을지는 의문을 갖게 했다.

작년 5월10일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방청객으로 참석한 두밀리분교 학생들 23명을 두고 "지금 아이들이 방학중이다.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원고대리인 변호사에게 짜증스런 반문을 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조약에서 가장 참신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라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12조 의견을 표명할 권리 1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한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12조 1항).

이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청문을 보장받은 물론 학교교칙에 대한 반대권, 부모의 이혼에 관한 반대권등 아동생활의 모든 분야에 장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94년 11월, 65주년 학생의 날을 기념해 흥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 서울연합회에서 고교생 4백50명을 대상으로 벌인 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학생자치활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반이상(2백20명)의 학생이 "학교 현장에 있는 일선교사와 학생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 다니는 학교의 교칙조차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LG그룹해고자복직실천협의회」(위원장 성한기, LG해협)는 19일 12시 여의도 LG본사 쌍둥이빌딩 앞에서 LG그룹해고자와 노동조합, 소비자, 학생 등 1백여명과 함께 해고자 복직과 인간적인 경영정책을 촉구하는 'LG그룹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LG해협은 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해고자들은 그동안 복직을 위해 끊임없이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구사대의 집단폭행과 고소·고발 뿐이었다"며 앞으로 해고자 복직과 노조 탄압 분쇄, 자주적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3시경 선포식을 마치고 LG해협사무실로 가고 있던 해고노동자 이동열(89년 해고)씨가 갑자기 나타난 백골단과 경찰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안양경찰서에 연행, 구속되었다.

이씨는 LG해고자복직을 위한 스티커제작을 이유로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지난 4월18일 과천에서 있었던 전태부 사건과 노조행사 참석 등으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평화시위에 이성없는 폭력진압

굴업도 해폐기장 철회 요구, 50여명 부상, 1백30여명 강제연행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동인천역 광장에서 '굴업도해폐기장 철회'를 마치고 평화행진을 하던 데크에도 주민과 대학생 1천5백명에게 곤봉과 최루탄 세례를 퍼부었다. 또, 오후10시쯤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인천중부경찰서로 향의방문을 간 2백여명의 학생들을 양쪽에서 포위,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끄러진 사람도 방패로 찌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연행한 사람들을 전경차에 가둔 뒤 차안에 사과탄을 터뜨리는 등 이성 없는 상술한듯한 행동을 했다.
이날 시위로 1백34명이 강

제연행되었고, 이중 박명후(20, 인천대 국문과)씨등 27명이 집시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상자는 모두 5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들과 방패에 머리를 다쳐 2~15바늘을 꿰맸다. 이중 정정환(20, 동국대)씨등은 두통과 구토증세를 보였으며, 김미진(여, 인천전문대 졸업)씨는 피를 토하는 등 장과열 증세를 보여 인천중앙경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50여명이 넘는 부상자의 숫자는 군사정권시절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인천시 경찰국장 해임, 인천중부서장 및 지휘책임자 구속 △부상자 치료·보상 △연행자 즉각 석방 △인천 앞바다 해폐기장 즉각 철회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2월말부터 지금까지 굴업도해폐기장반대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18명, 부상자는 32명이다.
한국통신노조에 경찰 투입 노조, 25일까지 단체행동 자제
22일 경찰과 검찰은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씨등 노조간부 1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21일 긴급구속된 오용철(교육국장), 김성용(산업안전국장), 김용광(조직국장)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장석규(사무국장), 정해자(조사통계국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통신노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철회와 사법처리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정오까지 단체행동 자체 약속을 어 떠한 회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지킬것"을 밝히며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통신노조는 명동성당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수배중인 유덕상씨는 22일 오전 10시경 하이텔의 노조통신망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리본투쟁을 전개하고 전국 각 지부에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와 사법처리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다.

군복무 상대생 4명 구속
최근 군복무중인 성관관대생 추경민(동양철학 89), 유민영(신방 87), 김수일(경제 89)씨등 3명이 기무사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년대 초의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오늘 항의집회

19일 군인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지하철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희롱, 이에 항의하는 조정국(28)씨를 집단폭행한 사건에 이어 21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줄리안 폴 A.씨 등 미군 8명은 춘천 소양로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갑자기 세운 뒤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한 황정근(25)씨등 2명을 집단폭행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20일 최문 앞에서 미군의 지하철 집단난동 사태 등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의 공개사과 △피해

자 배상 △폭행미군 엄중처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45년 미군주둔 이후 하루평균 5건, 연평균 2천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한국국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도 미군당국은 계속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2시 용산 미군기지 1번문 앞에서 미군의 지하철 집단난동 사태 등 일련의 폭력행위에 대한 미군사령부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 공판 안내 ●

- 5월 23일(화)
이영두(선고), 국보법위반, 오후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결심), 오전11시,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 5월 24일(수)
박순봉, 국보법위반,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 5월 25일(목)
변성수,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3부 319호
양윤모(선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4부, 418호
유용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30분, 서울형사 3단독, 425호
- 5월 26일(금)
오세중(선고),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9단독, 317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그에 걸맞은 노조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 산업현장의 안전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확대, 주택보장을 위한 대책, 전반적인 학교체계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더 큰 고려 등을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안(SUGGESTION AND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

17.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노조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파업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8. 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기회의 강화, 법제정과 공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 지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을 1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 개선은 국내 노동자와 국외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운 속소를 마련해주지 않는 철거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주택권에 대한 보충정보를 제공할 것을 바란다.

21. 위원회는 교육분야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고려를 권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하며 여성에 대한 중등·고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은 고려 속에서 이뤄지기를 권고한다.

22. 한국정부가 사회복지체계의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소의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복지체계의 시급한 확충이 촉구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극빈자와 집없는 사람,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희생자들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음호에 게재

주/간/인/권/호/름

(5월15일-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16일>

서울고법, 두말리 폐교 정당하다고 판결/경찰, 부산지역 4개대 10명과 고려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등 11명 구속 발표/서울시교육청, 「참교육문화 한마당」 참가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구

<17일>

5.18 책임자 기소촉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한국통신 노동자들,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 요구 발생/성·경부,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 더 도입키로/현대자동차-무기한 휴업, 분신대책위-노조원 1만여명 규탄집회/영국 경찰, 그린피스 본부 수색/남아공, 인권유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과 화해법」 하원 통과

<18일>

5.18 광주민주항쟁 15돌, 추모식 및 「5월정신 계승, 학술책임자 기소촉구대회」 전국서 치뤄져/서울지법, PC통신에 「공산당선언」 게재한 대학생에 원상 파기하고 무죄선고

<19일>

경찰, 새벽에 현대자동차에 병력 투입, 이상범 분신대책위 대표등 300여명 연행/김대통령, 「한국통신 파업은 국가전복의도」, 단호한 대처 입장 표명/슬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정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에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개 폭친 혐의 부부 가혹수사/인천 해폐기장 철거 촉구 시위에 경찰, 무차별한 폭력 행사 50명 부상, 130여명 연행/검찰, 현충원 간부등 구속방침 발표

<21일>

민주노총준비위, 광주서 3천명 노동자대회, 시가행진/경찰, 한국통신노조 간부 검거명, 한국통신측은 21일부터 주요 간부 64명 징계 착수

해설

광주민주항쟁 15돌이었던 지난 주에는 광주문제에 대한 여론보다도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노조를 둘러싼 노동문제가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국가전복의 저의가 깔렸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기야는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곧 이어 검찰, 경찰, 노동부의 전면적인 노조와 노동단체 간부들에 대한 검거와 수배가 잇따르고 있다.

마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 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동당 입당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신청

안기부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발표한 데해 현직교수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박창희교수(63, 한국외대 사학과, 구속중)는 4월26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이후 잠 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했다는 것이다. 그후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담당 수사관에 게 「노동당 입당」이 사실이 아님을 호소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15일 안기부는 박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노동당 입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검찰 기자실에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언론이 이를 받아 일제히 보도하였다.

박씨는 지난 16일 동아일보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차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했다. 박씨는 중재신청이유에서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듣고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역사학자들의 학문업적도 모독당했으며, 「국민학교 개명운동」등의 활

동도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언론이 자신에게 한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고문등 가혹행위를 통해 강요한 행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일어난 정현백 교수 사건, 청소년문화단체 「샘」,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잇따르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 들 사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야당당사 난입 해고자등 4명 연행

서울경찰청 소속 사범경찰 20여명은 23일 새벽5시경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사내 민주노총(준)해고자특위 사무실에 들어가 김재연(한국통신 사무처장), 장영길(전해투 대표), 허태구(풍산금속 병역특례 해고자), 박정수(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자)씨를 연행하였다. 이날 경찰은 각목을 들고 수색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왔다. 민주노총 해고자특위는 「24일 오후 3시 총회에서 418 경찰폭력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23일 경찰난입에 대한 대응을 주요 안건으로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미종합특수강 해고자 송철원, 김동연씨등 9

해고자 복지 촉구 2차 집회 LG 그룹 소비자 모임 「LG 그룹의 그룹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LG 소비자들」(대표 신용순) 회원 80여명은 22일 낮12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여의도 쌍둥이 빌딩 앞에서 「2차 해고자 복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범죄 사회단체들 한미협정개정 목소리 드높아

22일 저녁 의정부 고산동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마이클 노엘(19)이병이 근처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때린 뒤 성폭행했다.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사회단체들의 항의집회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운동본부) 회원 1백여명은 23일 오후2시 용산 미군부대 앞에서 19, 21일에 일어난 미군폭력행위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측의 공개사과 △미군범죄에 면죄부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또, 「불교인권위원회」등 8개 불교단체들은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등 여성단체들은 23일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정부는 한국여성들이 미군의 성적노리가 되고 있는데도 미군이라는 이유로 전혀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파악과 공동대처를 위해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찾고 있다.

이에 경찰은 22일 지하철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희롱한 미8군 헌병대소속 에이브러햄 에더슨(21)상병등 미군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인 / 권 / 어 / 록

◇ 한국정부가 마피아에게 배워야 할 것은? 마피아 조직은 협조자에 대한 서비스만큼은 확실하다. 물론 반대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나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적 직무만 놓고 보면 한국은 오히려 마피아보다 뒤떨어진 다.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 교수, 시사저널(290호) 5월 15일 시론 <폭발한 것은 가스만이 아니다> 중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스(Linda Chavez)씨가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제46차 인권소위원회는 차베스씨를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는 26일까지 4일간 머무르면서 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한국정부와 정대협, 태평양유족회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린다 차베스씨는 미국공영방송(PPS)의 프로그램 담당자이고 '기회균등센터' 소장(Director, Center for Equality Opportunity)이기도 하다.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
포천 주민들, 상경투쟁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등 4개면 주민 2백여명은 22일 서울 마포의 (주)마로(대표 신동림)에서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등 3명, 공투위)는 △소각장 건설 허가철회 △구속자석방 △주민들에게 내린 가압류해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근처에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의 장기등을 태우는 소각장이 생길 경우 병원균으

로 인한 각종 질병과 유전질환,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93년부터 2년동안 반대투쟁을 해왔다 (<인권하루소식> 4월27일자 참조).

공투위는 "(주)마로의 신동림사장이 소각장건설업체인 한국클린시스템(대표 박용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등 소각장건설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며 신씨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포천 병원 적출물 소각장 반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교수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고 유아무개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아무개 교수는 "우씨는 조교 제임용 탈락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7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적⑤>

"말하고 싶다, 알고 싶다, 전하고 싶다"

"어린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쪼그만 것이 말대꾸는 무슨 말대꾸야!"

"모든 게 다 너를 위해서니까 잠자코 따르지만 해!" 등등 하루도 야단맞지 않는 날이 없다.

중앙일보사가 지난 4월 국민학교어린이 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어린이가 10명중 2명이었고, 심지어 어머니와 거의 대화가 없다는 어린이가 4-10%에 달했다. 공부하라는 말에 짜증나고 성적이고민으로 답답한 어린이·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머슨씨는 66년 발표한 글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첫째, 개인의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다. 누구든지 자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자기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진리발견의 필수적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과 편견을 갖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판단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의사결정시 가능한 한 많은 다른 의견들을 대안으로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반대의견을 통해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구성원간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넷째,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안정과 변혁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현의 자유가 이만큼 중요한데 반해 학교교육이 이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나 법규범과 절차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정의, 평등, 존엄성, 권리와 책임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토론하고, 글이나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 원인으로부터 근거를 수집·분석하는 능력,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않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술등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5월말부터 지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 서준식

제일 128-10-131017 상업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 438-06-016840
외환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 112-182999-12-001 국민 015-21-0723-021
하나 105-106617-00107 신한 355-02-035530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 작성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들은 24일 오전10시 민주노동(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네바회의에 다녀온 민간대표단의 보고와 권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즉각적인 국내법 개정 등 정부가 빠른 시간내에 유엔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권고안-즉각적인 법개정 요구 민간단체들은 우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사회권위원회가 점진적인 개선을 권고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강경'한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동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결성권

과 파업권을 인정하는 입법청원운동과 사회권 조약에 대한 선전·교육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고안의 국내적 이행절차에 대해 문진영(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현행 국내법 중 권고안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법률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이행사항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추가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 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공동심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무책임한 답변 성토 사회권 조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의 정기 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부대표가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심의위원들은 교사의 노조결성권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당혹해하는 등 줄곧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회의를 전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처음 구두진술한 내용과 다른 추가답변을 하는 등 위원회의 상세한 질문과는 대조되는 지저분한 답변으

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예로써, 장소영(참여연대 국제부장)씨는 "정부는 노점상 장애인으로 분신한 최정환씨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그 사건은 보사부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이며 이미 장례비등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4월18일 노동부 장관을 면담하려던 해고자에 대한 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 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공동심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노동법등 개정 의사 없어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정부대표단 관련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정부관계자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고안을 국내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입장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의 국회답변에서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5월말부터 지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 서준식
제일 128-10-131017 상업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 438-06-016840
외환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 112-182999-12-001 국민 015-21-0723-021
하나 105-106617-00107 신한 355-02-035530

'향후 노동법 개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재야단체, 강한 반발

미군당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23일 성명을 발표,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2면 주한미군 대변인 성명 전문 참조).

이에 조재학 간사(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해야 할 미군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런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미군범죄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을 매도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한국인에 대해 우월감과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미군당국의 이번 성명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또 한번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 국제 인권 소식 ●

“민중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대”
PP21 3차 대회 내년 3월 스리랑카에서

자본과 권력엘리트들 중심으로 형성되는 아태지역의 수직적 국제질서에 대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민중적인 초국경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아태지역 시민사회운동의 네트워크인 「21세기 민중계획」(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PP21) 제3차 대회가 96년 3월5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다.

여명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중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대(집중) (People's Convergence - Reshaping our future)”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한편 PP21은 올해 11월 20일 오사카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대규모 집회와 심포지움을 열어, 보다 민중적인 아태지역경제협력 방안을 토론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회의에 참가한 인권협의 이성훈씨는 “최근 APEC의 등장과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증가 그리고 악화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시민사회운동이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3차 PP21을 계기로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아시아 국제연대역량을 강화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PP21은 ‘희망의 연대’와 ‘초국경적 참여민주주의(Transborder participatory democracy)’를 주된 목표로 지난 89년 8월 일본에서 해외 참가자만도 4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식 발족했다. PP21은 현재 아태지역의 인권, 노동, 농민, 도시민권, 여성, 환경, 핵, 소비자 등 거의 모든 부문운동이 망라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카리브해 중미지역으로도 확산되었다. 지난 92년 11월 제2차 대회가 해외 참가자가 약 5백여명 참가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2차 방콕 대회에 기사연, 환경연(구 공추연) 등이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PP21이 국내에 부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방글라데시 등 일부 아시아 국가처럼 PP21 한국위원회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 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찰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항의한 두 딸마저 감금, 폭행당했다.

고등학생, 광주 못 간다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

「참배음일꾼청년회」(참일청), 「샘」등 4개 청소년 단체가 광주기행을 위해 예약해 놓았던 8대학버스를 경찰이 협박하여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30분 버스가 약속장소인 서울역으로 들어서자 남대문경찰서 경찰 3명이 버스기사에게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광주에 가도 되느냐”며 차량번호를 적는 등의 협박을 가해 버스를 되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 “책임자를 밝혀내 공개사과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 주변에는 동일 여상과 성동여사의 교감, 학생부교사들과 장학사로 보이는 사람들 및 무전기들 등 사복경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

지난해 10월 머군에게 폭행과 불법구금을 당한 김금순(68)씨와 딸 설은주(31)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9회)
각국의 사법제도와 한국의 법조개혁

강사: 박흥규(영남대 교수)
일시: 5월2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주한미군 대변인 Col Michael V. Sullivan

<독자보고>

신성한 국방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김영환(양심선언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 간사)
23일 새벽 5시 각목을 든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된 이들중에는 허태구씨와 박정수씨라는 2명의 병역특례해고 노동자가 있었다. 병역특례노동자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방위산업체 같은 곳에 취직해 5년(93년 이후는 3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확대실시해 왔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병역특례제도는 바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병역특례노동자들은 해고되면 그동안 몇년을 근무했던 기간에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군에 입대하게 된다. 실제로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규식씨는 복무만으로 이들을 남기고 해고되어 징집되었다. 노동조합법에는 “해고된 근로자도 해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제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확인 여부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

구속적부심서 ‘조작’주장
반미불패 구속자들

지난 15일 이적단체 ‘반미불패 산악회’ 조직 사건으로 구속된 최홍제씨등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4일 서울형사지법 320호에서 열렸다. 구속자들은 “경찰이 발표한 ‘반미불패’라는 산악회는

만들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을 때 조작적인 관련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심리에서 이백수 변명에는 “공안당국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건주의식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여 이긴진 검사가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주요항목

- 1. 지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4. 장애인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단체 자체에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단위의 장애인 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 8.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보호,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20.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단위의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애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2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을 2%를 이행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까지 확대한다.
- 31. 지방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 32.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짓는 건축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복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편차를 고려하여 복지에 대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위 내용은 23일자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계속 면이 모자라 오늘자에 실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영장제시 무시, 새벽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혈안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 수배중, 한통노조)이 25일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지어는 학교에 간 아이들에게까지 찾아가 아빠의 거처를 묻는 등 수배자의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다.

정부 합법투쟁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한국통신노조」는 25일 12시를 기해 전국의 3백27개 지부에서 일제히 보고대회를 갖고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대다수의 지부에서 회의를 치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회사 관리직과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나와 회의를 지지하려고 해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인천지부에서는 회사측과 경찰이 회의를 저지하여 간부들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서울의 중앙전화국, 면목전화국, 청량리전화국 등에서는 회사측의 대회 장소 원천봉쇄 등으로 회의를 치루지 못했다. 또, 경기사업본부(지부장 박지곤)와 동수원지부(지부장 이정진), 서청주전화국지부에서는 전경들을 투입하여 지부장을 연행해 갔다. 이밖에도 노조통신망 지방본부위원장 김형배(48)씨와 노조 정책실장 강희석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노조의 한 간부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마저 국가전복 의도라고 매도하여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이며 노동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회사가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강경한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통노조는 25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 △출퇴근 시간 지키기 △매일 점심시간마다 보고대회 갖기 △25일부터 6월1일까지 전화, PC 통신을 통한 '대국민 홍보투쟁'을 전개하기 등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또, 임금가이드라인 철폐와 자율교섭보장등 현수막 부착과 함께 26일부터 오전9시로 돼 있는 출근시간을 지키는 출근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통해 「노동운동 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의 노동운동탄압 국면이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도를 넘어선 탄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계·법조계·정치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범국민대책기구를 이번 주중에 결성하였다. 민주노총준비위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대책위 구성과 함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이후 노동운동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홍보활동등을 중점적으로 펴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측을 단체협상 교섭기피를 이유로 고발하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가운데 울산지역의 재야민주단체와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 중이다.

노우협 의장등 구속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의장 김영곤씨가 경찰에 연행, 구속되었다. 93년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단병호위원장등과 함께 수배를 받은 전 전노협 쟁의국장 이상현씨도 같은 날 경찰에 구속되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 각계,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등 사회단체들은 23, 24일 민주노총 준비위 사무실에서 '당면 노동상황에 대한 각계각층 설명회'등을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5월말부터 지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 128-10-131017	상업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 438-06-016840
외환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 112-182999-12-001	국민 015-21-0723-021
하나 105-106617-00107	신한 355-02-035530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다양한 색의 단체들이 제한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벌칙조항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1호)고 되어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도 87조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 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박장우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명순씨등 원고들이 북한

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본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가 김일성을 지칭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무용사사극 「아침은 빛나라」라는 노래는 92년 이전에 김민희씨가 작곡·발표했고 이 노래는 「붉은 산 검은 피」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희망새」 소속 김태일, 허명순씨등 5명은 미완성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을 PC통신에 게재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 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져

재독 한인들은 분단 50주년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95 재독 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20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오월민중제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둔 요즈음 일주일 간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이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해의 신공안정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23일자(제408호) 2면에 실린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 기사중 주택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가 주택권에 대한 보충연구를 할 것을 바란다"는 "특히 주거권에 관련된 보충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의 번역상 오류였기에 바로 잡습니다.

○ 행사안내 ○

- 미군의 연쇄폭력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대회
 - 일시: 5월26일(금) 오후2시/ 장소: 충무로 대한극장 앞
 - 주최: 주한미군법령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순서: 촉구대회/중부경찰서 항의시위/거리행진(명동역)/미군사령부 항의시위
- 학생운동탄압 및 경찰의 불법수사, 인권침해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5월26일(금) 오후2시/ 장소: 홍익대 총학생회실
 - 주최: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 320-1440)
- 노동운동 탄압 저지와 지자체 악용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5월26일(금) 오후3시/ 장소: 종로 탑골공원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964)
 - 순서: 1부-결의대회, 2부-평화행진(명동성당)
- 문국진씨 고문유무증 손배소송 재판결과 보고회
 - 일시: 5월26일(금) 오후7시
 - 장소: 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서대문 경기대 입구)
 - 주최: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715-9185)
- 제1차 아시아 여성학 학술회의
 - 일시: 5월26, 27일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이대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아시아여성학센터(☎360-3225)
 - 내용: 동북아시아 여성의 지위와 페미니즘/동남아시아의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등
- 노동운동탄압분쇄와 '95 공노대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5월27일(토) 오후2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주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875-8110)
 - 순서: 1부-결의대회, 2부-평화행진(중요공원)
- 지하철 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5월30일(화) 오후2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 주최: 지하철개혁시민안전협의회(☎ 796-8364)
 - 내용: 시민서비스, 안전 및 운영/경영합리화와 노사관계/지하철경우 및 안전
- 고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시사회
 - 일시: 5월30, 31일(화) 오후4시
 - 장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강당
 - 주최: 서울영상집단(☎765-7611)
- 국제심포지엄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 일시: 5월30, 31일 오전9시-오후5시
 - 장소: 타워호텔 몽마르나스실
 - 주최: 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노동정책연구소(☎ 749-6052)
 - 내용: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인권개선 방안(박석운)/일본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민간단체의 활동(야와타 아키히코)/외국인노동자 인력송출국의 관점과 경험(아르넬 드 구즈만)/독일과 유럽에서의 외국인노동자(위르겐 에를)

◆ 동 정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27, 28일 이틀간 「강촌 유스호스텔」에서 8차총회를 갖는다.
- 서울영상집단은 두밀리분교 폐교문제를 다룬 최초의 고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를 제작, 28일부터 배급한다. 가격은 2만5천원. (☎ 765-7611)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진식 편집인 : 박재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 린다 차베스씨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린다 차베스(47, 미국인)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차원의 첫 조사를 마치고 26일 노총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차베스씨의 이번 방문은 95년 8월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전쟁중 노예제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그는 지난 5월 19-22일 동안 필리핀을 방문하여 30여명의 군위안부를 만났다. 그녀는 이번 방문의 소감과 보고서 작성의 의의에 대해 "지난 2년동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자료를 보았으나 직접 와서 피해자를 만나니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50년 전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가 유엔 문서에 남겨지고 일본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베스씨는 23일 입국하여 24일에 정부제2장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을 만났고 25일에 나눔의 집, 태평양유족회등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다. 또한 대한변협, 국회의원,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후 차베스씨는 27일 일본 방문을 끝으로 조사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미군범죄 규탄 확산

'주한미군범죄규정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삼근 외 7명, 운동본부) 소속단체와 학생 1백여명은 26일 오후 2시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뒤 지하철 성희롱 혐의의 미군을 수사중인 중부경찰서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운동본부는 그동안 미군범죄에 대해 예비수사권도 포기한 채 돌려보낸 경찰의 작성을 촉구하고 지하철 성추행사건의 공정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성희롱 미군 공정수사 촉구

'여성단체연합', '서울대교성희롱사건 공대위', '성희롱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등 여성단체들도 25일 주한미군 사령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더이상 미군의 성희롱·성폭행등의 인권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 성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통합선거법 제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선거법 제87조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상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 린다 차베스씨 인터뷰 ▶

조사활동을 마치고 난 소감은?
개인적으로 나는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연민을 느낀다. 피해자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는 일면 두렵기도 하지만 군위안부 문제가 정돈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는가?
일본군이 저지른 조직적 강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군위안부 문제를 쓸 것이다. 조직적 강간에 대한 국제법, 즉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조약에 중점을 두어 기술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 처벌에 관한 전례와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배상 전례도 추가할 것이다.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일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를 만나고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을 만나 그들이 알고 있는 위안소 예기를 들을 것이다. 또한 군위안부와 관련된 일본관리의 입장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간기금에 대한 입장은?
내 입장을 표명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이 왜 민간기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이 일본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번 보고서는 다른 모든 유엔 문서와 마찬가지로도 덕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성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제시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활동가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
한국정부는 나눈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는 미국에서 신문칼럼을 쓰고 방송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 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한통노조 징계구속 중지 요구

전국연합, 노조 농성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상복, 전국연합) 소속 회원과 시민 등 2백여명은 26일 오후 3시 중로 탑골공원에서 '노동운동 탄압저지와 지자체 악용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한국통신 노조 간부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한편, 전국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업결정을 통해 한국통신노조를 파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64명을 중징계

하고 구속시켜 파업을 유도하려한다"며 이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와 「전국대학가사노동조합」도 26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구속수배를 즉각 중지할 것과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통신노조에 대해 국가전복 파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64명을 중징계

[편집자 주] 국제우편·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Postal, Telegraph and Telephone International)이 26일 김영삼 대통령, 김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조백제 한국통신사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에 전문을 실는다.

전세계 5억의 통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우편·전신·전화노동조합연맹」은 가원장을 비롯한 64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및 구속을 포함한 경찰력 행사로 인해 회사측과 한국통신노조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데 유감을 표한다.

조사후 2명이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6명의 노조간부가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4명의 노조간부를 경찰이 계속 구금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체포하려 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국제노동기준과 우호적인 국제관계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위이며 현재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일원이 된지 불과 몇 년도 되지않아 노동조합 지도자를 적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통신노조의 지도부는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경영자측과 협상하려 고통받고 있으나 경영자측이나 정부나 상호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한국통신 뿐만 아니라 노조, 둘다의 최상의 이익속에서, 노조의 제안이 평화적으로 토론되고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를 가해서는 먼저 징계와 경찰력 행사 뿐만 아니라 6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취해진 고소·고발을 철회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런 조치는 틀림없이 한국통신의 산업평화를 위한 이상적인 상황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고소의 취하를 보장하는 우호적 개입과 아울러 얘기되는 징계와 경찰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U.L. Sasil do Basil do Silva
PTTI 아시아-태평양 대표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⑥>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아동학대

인권은 우선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몫을 찾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그 시작인 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조문을 짚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조약에는 난민 아동의 보호·원조, 장애아동의 권리, 소수자·선주민 아동의 권리, 경제적 착취와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마약·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유괴·매매·거래 방지,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22, 23, 30, 32, 33, 34, 35, 38조)이 있다. 이 규정은 바로 오늘날 세계가 처한 인권상황 현실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들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조약의 실천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사국은 아동이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학대방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으며(허남순 1992),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 3천명의 아동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소아과병원에 접수된 사례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학대양상과 그 결과는 방망이와 주먹으로 당한 전신구타, 심한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심한 경련과 주의산만, 욕하고 호전적인 행동, 영양실조, 구토, 설사, 골절, 타박상, 전반적인 심한 발달 지연등이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내학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속에서 성장해온 아동들이 폭력의 학습을 통해 아동학대자와 아내학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문제를 '남의 집안 일'이라는 식의 가족내 문제로 보고, 방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아동학대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공동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나서고 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9회)

각국의 사법제도와 한국의 법조개혁

강사: 박흥규(영남대 교수)

일시: 5월2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장롱 밑에서 도청기 발견돼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 안방에서

‘문민’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발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숙씨는 “4월18일 오전 7시 30분경 방 안에서 청

소를 하던 중 장롱 좌측 밑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동안 수상한 사람들이 침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안을 엿보아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이 제시한 도청장치에는 길이 41.5cm의 각목으로 모서리 끝에는 양면접착 테이프가 붙어있고 양쪽 끝에는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이 박

혀 있었다. 내부는 정교하게 파여 미세하고 복잡한 전기회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변은 전원을 공급하여 실험한 결과 FM 방송 주파수인 93.8MHz에서 전파가 잡혀 각목주위에서 했던 말들이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고 한다. 박씨 등은 52년 국방경비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61년 출소했다가 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년에 만기출소했다.

경찰, 삐삐도 엿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탄압 실상 폭로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 19일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미행과 도청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인권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구속학생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5월중순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홍익대)씨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했고 홍익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이용하는 빨래방에 맡긴 옷가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연세대 총학생회 간부 이재현(총학생회 사무국장)씨의 집에 수색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총학생회 지도부들에 대한 미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대 강철환(문과대 문화부장)씨 경우 27일

영장없이 방배경찰서로 연행되어 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강씨의 가족들은 그가 경찰에서 나왔을 때 손톱과 발톱이 까맣게 물들어 있어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아무런 물증없이 학생들을 연행하여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접수된 경찰의 인권 침해사례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고소·고발운동을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권과 대학인의 인권을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피습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김성희(홍익대), 오상훈(홍익대), 이용덕(성균관대), 윤상근(국민대) 등이다.

와 같은 총무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권력 투입등 극적인 조치를 피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총무원을 방문, 송월주 총무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승가회인권위」등 9개 불교단체들은 28일 한국통신 노동조합들의 조계사 농성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수배노동자 전원 석방 복직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들 불교단체들은 이어 불교, 천주교, 기독교등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노동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도 2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개입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이익 위주의 일방적 탄압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개입중단과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한편 회의는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에 입각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29일 오전 총무원회의를 갖고 한국통신 노동조합 농성과 관련된 공권력투입을 반대하고 “정부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등의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 덕신승려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한국통신 조계사사장을 방문하여 이

광주책임자 기소 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

「민주주의민족통일부천연합」(공동의장 김명원, 부천연합)은 지난 25일 광주책임자 기소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문을 부천시민의 서명과 모금으로 <부천시민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실었다. 부천연합은 광주민주항쟁 15주년을 맞아 회원과 일반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광주책임자 기소 캠페인을 5월초부터 벌여 그 결과로 자발적인 시민들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게재한 것이다. 서명과 함께 1천원씩의 돈을 모금한 이 서명운동에는 총 2천3백여명이 참가했다. 또, 부천연합은 지난 17일 부천로 알배화점 앞에서 광주책임자 기소촉구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홍근수 목사는 “현정권은 민족도 민중도 민주도 없는 무민(無民)정권”이라며 성토했다. 【부천=유홍】

는 시점”이라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국의 사과등을 촉구했다. 동지회는 27일 망월동 5.18 묘역에서 ‘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옥쇄한 동지들의 추모식’을 가졌다. 【광주=김미리】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지난 80년 신군부 집단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송(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모든 법적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국내에서 구제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제소이유를 말했다. 이씨의 제소를 대리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는 “인권이사회가 삼청교육문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견해를 통보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지료와 아래 구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 128-10-131017	상업 431-07-056582
능협 011-01-404581	조흥 438-06-016840
의환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 112-182999-12-001	국민 015-21-0723-021
하나 105-106617-00107	신한 355-02-035530

● 공판 안내 ●

□ 5월 30일(화)
 김무용(선고),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1단독, 424호
 함평기, 국보법위반, 오후4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전재순, 국보법위반, 오후2시, 서울형사 합의4부, 418호

□ 5월 31일(수)
 황인성, 국보법위반, 오후5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최승기,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신세규(선고), 국보법위반,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5부, 422호

□ 6월 1일(목)
 김성복, 존속살해, 오전10시30분, 서울형사 합의23부, 319호

주간/인/권/호/름

(5월22일-28일)

<22일>
 현충선,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95년 단·임투승리 결의대회’/서울지검 공안1부, 외대 박창희교수 “노동당 가입 부인했다”고 발표/미군, 클럽여중업원 야산으로 끌고가 구타뒤 성폭행/보건복지부, 3백人以上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3일>
 주한미군, 폭행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오히려 피해자’ 주장 성명 발표/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즈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 사태에 항의서위

<24일>
 미군, 수원서 점속사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등 5명에 대해 범무부측에 출국정지요청/민변등 8개 시민단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 촉구/민주당, 해폐기장 반대서위 벌이던 시민등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파견, 조사

<25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 비판하는 시위/진남 신임노동부장관 취임기자회견, ‘한통사태 위법행위엔 강력대처’/경찰, 미군 지하철역 시인폭행사건 미군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동총연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중내내로 확대키로

<26일>
 강원 춘천경찰서, 한국인에게 집단행패 부린 미군 6명 소환, 조사/부산지검등, 현대자동차 노동자파업과 관련 현대 계열사 노조 위원장 검거에 나서/한국통신 노조, 준법투쟁 돌입/정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추진

<27일>
 서울지검등,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의 집회 관련, 3차개입금지 혐의로 내사

<28일>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개최/한국통신 노조 구속자 및 수배자 가족 30여명,서울경찰청 앞에서 가택압수수색에 항의 시위

지난주에는 날마다 주한미군범죄가 대서특필되었다. 매일처럼 보도된 주한미군범죄는 느닷없이 터진 게 아니다. 하루 평균 5.5건씩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평상시에 언론이 무관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한미군범죄의 온산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몇가지 조항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현재의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며, 이는 ‘주권침해’에 앞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야 할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전면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위원장 임병태 신부, 광주정평위)는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보거나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이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검찰청을 방문한 조비오 신부는 "조성욱 검사도 '당시 기총소사를 했다'면 판피라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증거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찾지 못한다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많은 광주 시민들이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니 최초로 이를 증언한 조비오 신부가 증언자들을 확보해 검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광주정평위는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의 기소추구를 위해 광주시민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부탁했다.

광주정평위는 88년 국회 5·18 청문회 당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후 10여명의 목격자 제보를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1명의는 연락 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증언자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08호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62-227-6008 팩스 062-225-1306)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

여성단체등 시위

주한미군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연, 성희롱공대위등 여성 운동단체들이 앞장서서 주한미군의 공식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연과 성희롱공대위는 '주한미군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 여

성대회'를 30일 오후 2시 용산 주한미군본부 앞에서 가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AFKN에서도 자국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주둔군 여성에게는 아무런개나 해드 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석한 여성들은 영문과 한글로 쓰여진 2가지 종류의 피켓과 현수막을 준비하고 주한미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윤금이씨 사진, 김국혜씨 사진 사진을 전시해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집회를 구경하던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이정호) 대학생 소속 30여명은 29일

오전 6시 30분 대구시 중구 삼덕동 아메리카 센터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한미 행정협정개정 개정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분 남짓 시위를 벌였다.

또한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김명옥) 소속 학생 40여명의 학생들도 29일 오후 4시경 주한미군 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국연합은 "경찰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연합은 정부와 공사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 / 권 / 어 / 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있었으나 소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리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 잡아넣고 준법은 준법이라서 잡아넣겠다? 이 나라 더러워서 이민가야겠다던 선배의 말이 껏전을 때리는군요.

-천리안 토론광장에 게재된 글 중에서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등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헌법 제5조 중에는 「공공질서와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

아들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 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세모너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시민대회'를 경찰이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또,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포괄하여 구성을 추진중이어서 최근에 만들어진 재야단체로는 가장 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31일 운동본부는 서울지방

경찰청과 집회금지취소를 요구하는 항의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명동성당과 조계사,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재야와 노동단체들은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예총, 지식인연대, 가톨릭노동사목등의 단체 대표들은 29일과 30일 준비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6월1일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을, 6월3일에는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노동운동의 힘이 임박한 가운데 재야와 노동단체들은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예총, 지식인연대, 가톨릭노동사목등의 단체 대표들은 29일과 30일 준비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6월1일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을, 6월3일에는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노동운동의 힘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준비중인 이들은 공동대표로 김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김금수씨, 김진규 서울대 교수, 문규현 신부, 고영구 민변 회장등을, 이소선, 이동명, 계훈제, 백기완씨등을 고문으로 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인권하루소식> 발성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평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발송됩니다.

노동안타미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운동을 지켜낼 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추진 중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으로 △지속적인 선전사업 △시국선언 △시민중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노동조합 중재 △김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대처 △각계 통일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30일까지 참가가 확정된 단체는, 전국연합, 우리노동문제연구소, 민예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지식인연대, 시사연대, 민주노동준비위, 가톨릭노동사목, 한노협, 전민협, 전국노련, 민진정추, 노운협 등이다.

어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을 내려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인권하루소식> 5월6일자 참조).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열사 부친)은 26일 기실명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열사 부친)은 26일 기실명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열사 부친)은 26일 기실명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열사 부친)은 26일 기실명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어했다. 그러나, 총 2억8천만원의 청구액의 50%만 인정하고, 대학졸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을 내려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인권하루소식> 5월6일자 참조).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박종철열사 부친)은 26일 기실명회 개최 △통신개방과 한국통신재벌특혜인영화 반대시명운동 △집회 개최등의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두밀리 다른 다큐 시사회

서울영상집단

서울영상집단은 3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교육다큐멘터리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의 1차 시사회를 가졌다.

「작은학교」 폐교반대활동을 통해 농촌문제를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폐교조치를 취한 교육관계자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담아 폐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

정들었던 학교를 되찾기 위해 싸워온 아이들의 모습은 교육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손가락중 제일 작은 새끼 손가락도 봐줄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두밀리 노인 회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밀리처럼 사라져갈 2백97개 학교에 관심을 가질 이유다.

이 다큐멘터리는 31일 4시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세달 1일 한겨레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2·3차 시사회를 갖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지로와 아래 구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서준식

제일 128-10-131017	상업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 436-06-016840
외환 057-18-336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 112-182999-12-001	국민 015-21-0723-021
하나 105-106617-00107	신한 355-02-035530

인권하루소식

95년 6월

(제415호 - 제434호)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외국인노동자 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더이상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임이 30·31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공유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국내외 활동가들이 모여 각국의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등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각국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기준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모색하였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해 유구영(민주노동(준) 집행위원)씨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결국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한국정부는 외국노동력의 수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주로 인권단체가 나왔으나 앞으로는 노동조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수원교구사회사업실 대표)씨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인권조약을 한국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비준하도록 노조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동부의 3자가 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도입과 관리를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험을 발표한 위르겐 에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통합정책은 독

일사회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는 선택적 권리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와 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ES) 주최로 열렸고 주한 필리핀·독일 대사관 관계자, 외국인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

86년 3월10일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행방불명된 뒤 44일만에 식물인간으로 발견, 그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점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씨와 김상원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기록상으로 분명하다”며 10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 김상원씨의 동생 김상모(40)씨가 집요하게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의 집회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의 허가방침은 30일 서울고법이 내린 ‘폭력시위 가능성은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운동본부가 집회신고를 한 2일 서울역 앞 ‘주한미군범죄 규탄집회’를 서총련학생들의 참가로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경찰측은 5월29일 집회금지통보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예정대로 2일 오후3시 서울역 앞에서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용산미군사령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

<고침>-----
31일자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기사중 한겨레문화센터 시사회는 1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지로와 아래 구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예금주 : 서준식 | |
| 제일 128-10-131017 | 상업 431-07-056582 |
| 능협 011-01-404581 | 조흥 438-06-016840 |
| 외환 057-18-33811-7 | 우체국 013292-0011731 |
| 한일 112-182999-12-001 | 국민 015-21-0723-021 |
| 하나 105-106617-00107 | 신한 355-02-035530 |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분 총목차(394-41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5/2	394	1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한국 지부 노동절 성명/조선대 교직원집장 구속, 전남대생도 연행·조사중
		2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열어, 부친외국인노동자의 집/포천 음독 이병준씨 장례/국보법·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주간인권호름
5/3	395	1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인권어록
		2	어머니 상습폭력 보다 못해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맞벌이부부 아동 위협에 방치 여연, 방과후 어린이문제 토론/대구참사 줄속수사 규탄/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 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요구
5/4	396	1	노동운동 전면적인 탄압에 제3차가입선언,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진상규명, 구속자석방 촉구 5.3동의대사건 집회열려/어린이성폭력에 방비비디오홍보 「한국성폭력상담소」/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강연 17일 정대협, 대한변협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1>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행사와 동정
5/6	397	1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4천만원 지급하라」/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2	새날을 열어가라 아이들의 한마당 행사/어린이권리 홍보물 배포/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처벌 요구 성명/<독자기고>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5/9	398	1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요구도/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2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강의/<인터뷰>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중현교수 한국, 인권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화야/<해설> 특별보고관이란?
5/10	399	1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국보법등 조사 활동/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2>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해설>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특별보고관
5/11	400	1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스리랑카 협상촉구 국제인권단체/김무용씨 제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의 외국인 119네트웍/대검 수배자 검거명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2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다음주 방한, 일본군 중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취등 조사활동/경찰 대학교내 진입 '인혁당'추모비 철거, 영남대·경북대 항의시위
5/12	401	1	“가장 악명높은 투자가” 해외진출 한국기업 심각한 노동통제 현지 노동자와의 마찰 심각, 참여 연대 토론회서 지적
		2	북한 수감자 8백명 이상,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 북한 방문 결과 발표/대구 재야단체 단식농성, 대구참사 축소수사 항의/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분신, 노조행사 참가 정문에서 저지당하자 격분
5/13	402	1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이장압력/천주교 제주교구 관계자 조작간첩 이장형씨 만나/시위통제선 철회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미군범죄구결 운동본부/특별보고관 방한 연기
		2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올해협 노동자 텐트농성중 양봉수씨 분신사태 항의/철거테러 공동대응키로 고소·고발운동등 펼쳐/윤기남씨 묘 강제이장 광주시청, 가족동의 없이
5/16	403	1	방치된 어린이 전화친구 부스리기선교회, 개통식/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배변호사 자격박탈 진정 한국여성의 전화/5.18 광주민중항쟁 15돌 기념행사일정
		2	서울고법 두밀리분교 폐교에 정당성 부여 주민들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의지 표명/현대노동자 작업거부·항의농성 확산 현대·노동부, 불법파업 규정 강경입장/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인권어록
5/17	404	1	정부, 유엔 '사회권'심의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증언부언으로 질문회피/<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3>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2	정부가 유엔 '사회권'심의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증언부언으로 질문회피/<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3>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분 총목차(394-41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5/18	405	1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김무용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한국사회의 이해」첫 재판
		2	오사카 APEC정상회의 때 일본, 국제NGO회의 개최/동티모르 어린이음반 호주 록그룹들/동티모르 순회공연계획 일본 동티모르지원그룹/한총련, 5.18책임자처벌 농성/KNCC, 최규하씨 증언 촉구건의/부풀리기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문화행사 참가 교사에 서울 교육청, 경위서 요구/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방한
5/19	406	1	순수 노조활동을 파업으로 내모는 정부와 한국통신 한국통신노조/분신 양씨 빼돌리려/경찰, 대학 강사 양효식씨 집에서 영장없이 연행 기도/이형기씨 대책없는 퇴원
		2	경찰,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 고려대생 7명등/최규하씨 면담 거절,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
5/20	407	1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에 김대통령, 「한국통신노조 국가전복 저의 있다」고 19일, 현총련 노동자 800여명 연행돼/장애인 단체들, 45개정책과제 제시
		2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간부, 집회 후 구속/<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4>-의견표명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
5/23	408	1	경찰, 평화시위에 이성없는 폭력진압, 굴욕도 핵폐기장 철회 요구·50여명 부상 130여명 강제연행/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한국통신노조에 경찰 투입 노조, 25일까지 단체행동 자제/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
		2	교수·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신청/하루가 멀다하고 미군범죄, 사회단체들 한미협정개정 목소리 드높아/경찰, 야당당사에 제집 드나들듯 해고자 등 4명 연행
5/24	409	1	유엔특별보고관 중군위안부 조사위해 최초 방한/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성희롱 국가에도 책임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5> “말하고 싶다, 알고 싶다, 전하고 싶다”
		2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재야단체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 강한 반발
5/25	410	1	민중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대 PP21 3차대회 내년3월 스리랑카에서/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2	<독자기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반미블랙 구속자들, 구속적부심서 ‘조작’주장/지방자치시대 장애인 복지정책 45대 과제 주요항목
		3	영장제시 무시·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비투쟁/각계,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노운협의장등 구속
5/26	411	1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희망새」 사건 정정보도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제독교포 국보법 철폐촉구, '95 오월민중제 가저
		2	유엔,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미군범죄 규탄 확산/여성단체, 성희롱 미군 공정수사 촉구
5/27	412	1	한국통신 ‘평화’로 가는길 징계·구속의 채찍 거둬야/<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6>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아동학대
		2	장릉 밑에 도청기?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경찰, ‘빠빠도 엇듣는다’ 구속학생공대위, 학생단입 실상 폭로/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
5/30	413	1	광주책임자기소 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2	광주 5.18 행기남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명위, 검찰 수사되지 않아 직접 찾기로/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 여성단체등 시위/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 전국연합 성명
5/31	414	1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금지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인사들/1심판결 불복항소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두밀리 다른 다류 시사회, 「서울영상집단」
		2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금지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인사들/1심판결 불복항소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두밀리 다른 다류 시사회, 「서울영상집단」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위해 똘치

최근의 한국통신, 현대그룹 노조등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이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노동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결성식과 기자회견에선 현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공격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성숙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인권대책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위에 맞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쟁의발생결의 등 파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전복 저의’ 등을 운운한 것은, 노동계와의 일대 충돌을 조장하여 파국을 유도함으로써 지자체 선거에서 예상되는 참패를 만회해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준비위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진영의 운동역량을 약화시켜 10월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출범을 저지,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

했다. 또, “정부는 임금억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주요노조 및 주요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탄압으로 공동대응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대응과 그 의도를 비판한 참석자들 중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씨는 “법도 모르는 정부에 맞서서 정부에 법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이번에 많은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특히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인권대책위에는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등 35개 재야·노동·종교단체가 참여하였고, 이돈명, 이소신, 백기완, 신창균씨등 총 86명이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첫 사업으로 오는 3일 오후3시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대회”를 가지며, ‘통신주권 수호와 한구통신 재벌특혜 명영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 (<인권하루소식> 5월31일자 참조).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권 사건

지난 5월30일 새벽, 전남대학교 민족사랑학생연합(민사련) 소속 학생 3명이 전남보안수사대에 의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 유포, 연방계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안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연방계중 도총환(농토공학과 4년)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되었다.
구속자 명단: 추병주(전기공학과 3년), 남종호(기계공학과 3년), 강성일(물질공학과 4년) 【광주=김미라】
전북지구 기무부대와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군북무중인 황충연(24)일병, 배영석(24)상병 등 현역 군인 2명과 원광대 성민식(30, 94년 철학과졸), 김용연(25,

약학과4년)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혐의내용은 원광대에 재학중이던 93년초 ‘자주대오’에 가입한 뒤 씨등과 함께 학생회관과 학교주변 하숙집을 돌며 ‘김일성회고록’등 주체사상 관련 북한원전을 학습했다는 것과, 학내세력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 익산경찰서 산하 일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와 구속자 가족들은 이를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경 보안과와 기무사가 벌이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1·2년전의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아서 구속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중에 일체의 면회를 허용치 않고 밀실에서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가족과 관련자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명이 더 연행되어 있고, 추가로 35명 정도에 대해 내사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유경은】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0회)

분단 50주년을 맞는 민족사적 과제
감사: 흥진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일시: 6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수배중)의 간부들이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직격 인터뷰를 가졌다. 6명의 노조간부들은 오랜 농성중임에도 피곤한 기색없이 노조의 침병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었다.

△ 정부는 줄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을 뿐 근무에 대한 서비스는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하고 있다. 징계부문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몇몇 특정이 아닌 모두가 정계를 당해야 그만큼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다. 초기에는 정부의 강경입장과 간부들의 수배로 침체됐으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조합원들에게 온 대부분의 정보는 “명령만 내리면 무엇이든지 할 결의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 노조간부의 수배·구속등 어려운 상황에도 조합원들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 현 집행부가 들어선 후 현장교육을 강화했다. 분임토의를 통해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쟁전술을 모색했으며 고스톱과 음주문화를 없앴다. 또한 위원장이 직선으로 당선된 이후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특혜(승용차, 운전기사, 기밀비등)를 없앴다. 우리는 스스로 노동귀족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 정부와 회사의 강경대응에도 투쟁을 지속시켜 나갔던 힘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 조합원들이 차분하게 준법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회사와 정부는 쟁의발생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파업할 우레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구속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통신대란 운운했지만 조합원은 준법투쟁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하이텔,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새롭고 다양한 투쟁 방식으로 경찰이 수배자들을 찾는데 어려워 하는데...
-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경찰의 감청이나 도청도 조합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 조합원들 가족의 경우 인권침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고문 변호사와 의논해서 고소·고발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 준법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에 대한 한치의 서비스 오차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철회와 회사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원한다.

○ 행사안내 ○

- 미군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 일 시: 6월2일(금) 오후3시
· 장 소: 서울역 광장
· 주 최: 주한미군법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 일 시: 6월2일(금) 오후1시
· 장 소: 종로성당 3층
· 주 최: 전국도시민민협의회(☎ 365-3278)
· 내 용: 한국사회의 도시빈곤 문제와 대안(조홍식)/저소득 주민의 주거현실과 대안(유계현)/저소득층의 고용현실과 대안(김수현)/빈민지역 아동, 청소년 문제와 대안(임혜숙)
- 단오맞이 주부축제-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운영 기금마련 제10회 장터
· 일 시: 6월2일(금) 오전11시~오후4시
· 장 소: 장충단공원
· 주 최: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
-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 일 시: 6월3일(토) 오후2시~5시
· 장 소: 서울역 광장
· 주 최: 주한미군법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내 용: 지하철 난동사건 피해자 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보장 촉구 국민대회
· 일 시: 6월3일(토) 오후3시
· 장 소: 장충단 공원
· 주 최: 부당한 공권력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747-4364)
- 무주택자의 날 선포 3주년 캠페인
· 일 시: 6월4일(일) 오후1시~4시
· 장 소: 명동성당
· 주 최: 전국도시민민협의회, 서울개척자치실현시민연대 등 (☎ 365-3278)
· 내 용: 1부-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서울시정개혁 촉구 대회/2부 견기대회
- 긴급토론회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 방향」
· 일 시: 6월5일(월) 오후2시
· 장 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
· 주 최: 주한미군법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내 용: 한미행정협정 행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장희)/민사청구권 등 협정전반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장주영)/미군범죄의 실태와 근절방안(김용환)
- ◆ 등 정 ◆
· 미군범죄와 기저촌 문제를 다룬 「땃벌」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6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에서 열린다. 「땃벌」의 작가 안일순씨는 주한미군법외근절운동본부의 여성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8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과 서총련 학생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5월19일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성취회를 하는 미군을 말리다 폭행을 당한 조경국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1일 서초동 검찰청에서 미군들을 소환조사하였는데, 덩치 큰 미군 8명이 나한테 맞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당국이 각성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씻기 위해서라도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3일 현재 당시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눈의 피멍이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용산 미군사령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집은 삶의 휴식처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도시빈민연합」(도빈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등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를 무주택자의 주간으로 선정하고 정책토론회와 촉구대회, 검거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포했는데 신동우(주거연합 조직국장)씨는 그 계기에 대해 "92년부터 무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의 권리는 생명과 같은 것임 때문에 일부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강제철거에 대해 반대로 대우받을 내용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거문제를 권리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순환식 재개발 정착 주택공급 도입, 국민취거 주거기준 마련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법적 지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2일 '지방자치와 도시빈민의 문제'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도시빈민의 주거, 고용, 빈민지역의 아동·청소년 문제,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량주거 개선에 관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홍의 3인)를 결성하여 11월 국공유지 확대, 주거에 관한 공개정책, 순환식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96년 6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96 세계주거회의'를 앞두고 도시빈민 단체들은 6월말경 (가칭) '96 세계주거회의의 한국민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개혁 시민토론회

「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는 지난 1일 기독교연합회

관에서 현재 지하철 환경과 요금,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김윤신(한양대 의대)교수는 "공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철 환경기준치 설정과 관련당국의 지속적인 환경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96년부터 매년 500억의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이윤호(신용평가원)실장은 "지하철 요금은 99년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정환 시민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악화의 원인을 "지하철공사가 경영적자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요금인상, 인력감축등의 정책을 취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을 위해 △수도권 교통특별법 제정 △전문자율경영체제 확립 △서울시의 지속적인 시비 보조 등을 주장했다.

김무용씨 집행유예

지난 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 30일 1심선고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0회)

<특강>분단 50주년을 맞는 민족사적 과제

강사: 흥진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일시: 6월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광주시의원 오종렬 의장 징역 3년 10월 선고

1일 광주지법은 오종렬(광주시의원)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에게 징역 3년 10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91년 강경대 열사 사망이후 펼쳐진 분신정국속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일과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집시법, 특수공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지난해 12월말 구속되었다.

또한, 김병균(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등 3인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인도 오씨와 마찬가지로 91년도의 분신정국 때의 문제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전남연합의 경우 지난해부터 본부 간부만 11명이 구속되었고, 3명이 수배중이다.

경찰폭행 항의 분신 이형기씨 1일 운명

지난 4월20일 안산경찰서 원신파출소 앞에서 분신한 이형기(38)씨가 1일 밤 11시경 운명했다. 이씨는 원신파출소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분신했는데, 이씨는 국립의료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오다 43일만에 운명할것이다. 이씨의 장례는 3일 화장으로 치류된다 (<인권하루소식> 4월25일자 참조).

◆ 인권간행물 ◆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 한국장애인복지공대회(☎ 521-5364)
 ·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지역별 과제 등. 172쪽. 값 5천원.
- 8차 정칙총회자료집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삶의 질을 위한 경제발전과 개혁(장하성)/잇따른 대형참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의수) 등. 30쪽
- 한국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 - 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한국자본의 해외진출(강응중)/제3세계가 고발하는 제국주의 한국 등. 87쪽
-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749-6052)
 · 주요내용-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인권개선 방안(박석운)/일본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상황과 민간단체의 활동(야와타 아키히코) 등. 163쪽
- 서울지하철개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796-8364)
 · 주요내용-지하철 공기오염과 개선방안(김윤신)/지하철 요금 너무 빨리 올려라 한다(이윤호) 등. 55쪽
- 정당한 가사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자료집-주부의 일, 제대로 인정받고 있나?-여성민우회(☎ 269-5736)
 · 주요내용-가사노동가치 평가의 필요성/기혼연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방법 등. 37쪽. 값 3천원.
- 「벨루」-여성의 전화(☎ 269-2962)
 · 주요내용-무방비상태, 가정폭력이 살인 부른다/미국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방지법」글자 등. 16쪽
- 정책토론회-지방자치와 도시빈민의 문제(☎ 365-3278)
 · 주요내용-한국사회의 도시빈민 문제와 대안(조홍식)/저소득주민의 주거문제와 대안(유재현)/저소득층의 고용현실과 대안(김수현) 등. 56쪽.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4월말 대학살이 벌어진 르완다 남서부 키베호난민촌의 참혹함은 준비하게 늘어진 '어린 주검'으로 대표된다. 르완다와 같은 예는 모잠비크, 앙골라,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보스니아등에서도 보여진다. 언제나 학살의 현장에서 가장 참혹한 희생자는 여성과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의 폭탄테러, 일본의 가스테러, 르완다의 8천명 학살이 며칠간격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임을 다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미래의 희망인 지구의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난민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22조 2항).

전쟁에서 숨진 군인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유네프는 '95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전쟁으로 2백만명의 어린이가 죽었고 45백만명의 어린이가 신체장애인이 되었으며 5백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난민수용소로 보내졌고 1천2백만명의 집없는 어린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집단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수백만 어린이,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 기회를 잃은 어린이, 집과 부모, 학교와 안정을 잃은 어린이가 자라나서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될 것인가. 15·20년후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3조 1항).

최근 파키스탄의 12살난 소년 노동운동가 마시의 죽음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아시아 지역 어린이 노동의 실상은 참혹하다. 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과 파로등에 시달리고 있다. 2천5백만명의 취약아동 가운데 37%만이 정규교육을 받을 뿐 5-15살 사이의 1천만명 어린이들이 캠프 직조공장이나 벽돌공장, 농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인도도 경우 인도정부는 자국내 2천만명의 어린이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사회운동가들은 5천5백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간개발이란 경제적 성장만을 넣는 개발이 아니라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여성, 어린이를 향한 개발이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을 미흡하나마 7회로 마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기행국은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성희롱에 멎든 백의의 천사

태백시 장성병원, 간호사들에 접대 술시중 강요

직장내 성희롱을 감사·감독해야 마땅할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가 피고용인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백시 장성병원(원장 추연상) 간호사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간호부장, 태백 지방노동사무소장, 장성병원장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성병원 간호사 20여명은 91년부터 지금까지 1달에 2~3차례 걸쳐 태백시 지방노동사무소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강제 동원되어, 술시중을 들었으며 충상대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태백노동사무소는 장성병원이 청구하는 산재의료비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술자리에서 간호사를 동원하여 사무소 직원을 접대해 왔던 것이다.

간호사들은 "그들은 우리를 기쁨조라고 말하는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이제 더이상 참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건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5월 16일 간호사들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진정서를 보내어 병원 특별검사를 요구했고, 술자리 동원에 앞장선 간호부장은 1개월 감봉과 타지전출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병원측은 문제를 제기한 5

명의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인사와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1백20여 간호사들은 병원의 횡포에 항의, 8일 제 농성을 하며 보복인사 철회와 간호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간부들이라는 데 더

바뀌지 않는 문민경찰 불법연행 후 면회도 안시켜

구속 LG 해고자 2명 단식 16일째

집회 및 시위 관련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인 불법검문과 연행, 면회금지등 구태의연한 대응에는 변함 없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2시 학생 1천5백여명이 연세대에서 '청년학생 3자 개입 실천 대행진 출정식'을 가진 후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려하자 이를 진압했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주변을 지나는 택시, 자동차를 세우거나 커피숍, 카페를 수색하는 등 과도한 검문을 벌여 집회와 무관하게 21명을 연행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최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는 연행된 이들이 5일 새벽 1시를 기해 임의동행 6시간이 넘었는데도 경찰이 석방은 물론 면회도 금지하는등 불법 강제구금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행된 학생들은 현재 강서, 마포, 영등포경찰서등에 구금되어 있다.

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다. 한편 포항지역해고자 이회창(조선내화 해고자)씨도 형산강 다리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4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아사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주택자 주거안정 촉구

'전국도시민련합의회'등 3개 시민·경제단체 회원 4백여명은 4일 오후 1시 명동성당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서울시정 개혁 촉구대회를 가졌다. 촉구대회에서 이들은 서울시장후보들에게 전월세값, 재개발사업등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협정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강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환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발제 내용은 8일자 게재 예정)

● 공판 안내 ●

- 6월 7일(수)
 - 서중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오전 10시, 311호 합의 21부
 - 안호상외1인(선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 10시, 317호 3단독,
 - 이진영, 국가보안법 위반, 오후 4시, 424호 1단독,
- 6월 8일(목)
 - 성명규, 국가보안법위반, 오전 11시 311호 합의21부
 - 박상준, 국가보안법위반, 오후 3시30분 311호 합의21부
 - 장세민, 국가보안법위반, 오후 4시30분 311호 합의21부
- 6월 9일(금)
 - 조두현, 국가보안법위반, 오후 3시, 318호 10단독

<특별기고>

'준법'이 왜 '불법'인가(1)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 출퇴근, 리번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불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예컨대 정시 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의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법을 실제로 지키려면 사용자와 충분히 교섭하고 복잡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준법'이 왜 '불

법'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가 공무원의 경우는 물론 금지되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도 과도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므로 준법투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지키는 것만이 법이고 근로자가 지키는 것은 법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닌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근로기준을 정한 법은 이제 법이 아닌가? 이것이 문민정부의 법인가?

법인가?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준법'이 왜 '불법'이 되는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근로자가 법을 지키려고 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가 법이라고 하는 것만이 법인가? 정부가 지키는 것만이 법이고 근로자가 지키는 것은 법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근로기준을 정한 법은 이제 법이 아닌가? 이것이 문민정부의 법인가?

법령이나 규칙을 준수하여 행해지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일부 몇 나라에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준법투쟁은 법으로 금지되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취급되지는 않고 그야말로 '준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쟁의행위를 볼 수 있는 일제휴가투쟁 등의 경우에도 그 정당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쟁의행위는 보호되는 것이지만 단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가 공무원의 경우는 물론 금지되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도 과도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므로 준법투쟁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하여 더욱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으나, 문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가 그것도 '불법'쟁의행위로 금지하고 자 한다는 점에 있다. 곧 한국에서는 준법도 불법이 된다. 도대체 쟁의행위는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탄압되는 것이다. 이렇고서야 어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통신노조가 사용한 준법투쟁은 정시 출퇴근이 정시 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저해를 요소로 하는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연장근로의 거부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역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

주간/인/권/흐/름

(5월29일-6월4일)

<5월29일>
김도연 검찰총장, 한국통신노조 간부 사법처리 강행 방침/서울 중구3동 셋방살이 쫓겨나서 생활고 비판 분신자살/교수경질연등, 노동단합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척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에 고발

<5월30일>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로 시위금지 위법 판결/부산여대 총학생회, 음악학과 김아무개 교수 상습적 성추행, 학교에 탄원/제일동포 7개 인권단체, 김대통령에 '위안부' 해결요망서 전달/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치하의 전 중앙정보부장 반 피노체트 활동 요인 암살에 징역 7년형 선고/광주 정평위, 5.18 당시 헬기 난사 목격자 직접 찾아나서

<5월31일>
정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안' 발표/미국 노동부, 국제노동코트 비교조사, 한국 노동자 노동비용이 미국의 37%, 일본에는 30%라고/현대정공 노조 쟁의발생 신고

<6월1일>
MBC 노조 집행부, 불공정 보도중지, 정부의 방송통제 중지등 요구하며 무기농성 돌입/정부 당국자, 평양주민 1백만 강제이주 추진하였다 발표/35개 사회단체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 결성/서울지하철, 병원노련, 현대정공, 한국중공업등 대규모 사업장 노동쟁의 확산/한국통신 노조에 검찰 불구속사 등 검토, 노조-정부 강경대응엔 10일 대규모 규탄집회/경찰 폭행 항의분신, 이형기씨 43일만에 운명

<6월2일>
오스트리아 의회, 나치 당시 학대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법 통과/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과 소수민 우대법 사실상 폐지/서울지법, 지하철 파업때 공사측도 불성실한 교섭태도 책임, 노동자에 감형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강석재/주한미군, 외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평화적으로 체결되었고, 식민통치와 무관하다고 주장/정부, 노사안정특위 구성 가동/5.18 관련 인사, 최규하씨 내란혐의로 고발/대검찰청, 을 3월까지 피의자중 무죄율 1심-0.54%, 2심-1.43%로 일본의 5배 이상/현대중공업 쟁의신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반려/정부, 한국통신 사태 모든 방법 동원 조기종식 방침, 노조는 민자당사 항의방문/노동인권대책위원회, 장충단 공원에서 1만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망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 개최

<6월4일>
정부-시민단체, 와타나베 전 일본외상 망인 규탄/전국 20여개대 2천여명, 연세대에서 노동단합 중단 요구하며 화염병 시위/한국통신노조, 5일부터 준법투쟁 강화키로/검찰, 5.18 관련 최규하씨 방문 조사하기로/미군 3명, 동두천에서 한국인 여성 2명을 폭행/정부, 노사관계대책위 설치하여 공익사업장 쟁의 즉시 직권중재, 제3자 개입 철저 차단 방침

<이달의 주제-사회권>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등 천주교, 불교등 강경대응 선언

6일 경찰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 한국통신 노조집행부를 강제 연행하자 노조는 투쟁강도를 높이고, 노동계·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수배중)는 7일 '위원장 투쟁명령 3호'를 하이텔을 통해 전달,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각 지부 사무실에서 10일까지 집행부 철야농성을 하고, 전 조합원이 출퇴근 투쟁을 실시하며, 10일 지방본부별로 규탄대회를 열 것 등을 지시했다. 또한, 수배 중인 유덕상 노조위원장은 노조 부위원장 서리로 서울 전신국 지부장 최병훈씨를 임명했다.

성소난입, 종교계 강력 반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대표 김동주, 천정연)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통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교회의 열망을 무참히 짓기엔 김영삼 정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천정연은 6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명동성당 난입에 대한 공개사과 △내무부 장관 서울시경찰청장 해임 △한국통신 구속노동자 석방 △노조간부의 수배조치 해제 △노사자율교섭등을 요구했다. 또한 천정연은 매일 오후 7시 명

동성당에서 규탄대회를 가저 노동권과 교권침해를 널리 알리고 13일 시국기도회를 명동성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사제들 또한 8일 서울대교구 산하 사제들의 서품연도별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 「동국승가회」등 불교계 51개 단체는 7일 「66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대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승려)를 구성하여 12일 불교도 1천만인 시국선언문을 발표, 15일 대규모 시국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22일경 각 교구본사 대표들이 모이는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종회'를 소집하여 교권유린 사태를 안건으로 상정, 교계내로 확산시킬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목사)도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장관의 퇴진 △자율적인 노동쟁의 활동 보장등을 요구했다.

사회단체, 10일 규탄대회 전국연합, 민주노총(준), 민예총, 민족문화작가회의, 노동인권대책위 등 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삼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노동운동연합 규탄대회를 갖기로 해 정권과 재야운동세력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 1천여명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동국대에서 '성소 공권력 침탈과 공안선거 조장 김영삼 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오후 6시부터 명동과 종로 일대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정부, 강경탄압 유지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열리기로 한 한국통신노조 전국지부장회의는 회사 관리자 4백여명과 경찰병력 10개중대가 원천봉쇄해 무산되었다. 노조 지부장들은 원천봉쇄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3시 30분경 자진 해산하려 했으나, 경찰은 32명을 연행, 동대문경찰서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조정국씨 단식농성 연기

지난 5월 19일 총무로 지학철역 미군집단폭행 피해자 조정국(28)씨가 7일 미군의 사과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려던 것을 개인사정으로 연기했다.

조씨는 지난 6일 치료를 받던 방학동 정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그의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농성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그는 "미군들이 폭행을 해 놓고도 전면부인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의 상태가 나아지는대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알림>
 이번주 인권강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사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행형법'(17일, 박관운 변호사), '노동법'(24일, 김선수 변호사) 강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날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10여명은 서울노운협 산하 「민주노조운동연구소」(소장 박승호)에 오후 7시경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들어와 서적과 문건, 서류등을 가져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통신 사장을 경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며 "신임 사장 취임이 불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 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월 전역했다.

경찰이 학생시위를 진압하면서 달리는 지하철을 세우고 곤봉으로 지하철 유리를 깨는 등 과잉진압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학생 80여명은 5일 있었던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씨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오전 8시 조계사에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려 대기중이던 경찰이 즉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 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월 전역했다.

살인미수 저지른 '문민' 경찰

안국역 학생시위 강경진압

경찰이 학생시위를 진압하면서 달리는 지하철을 세우고 곤봉으로 지하철 유리를 깨는 등 과잉진압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학생 80여명은 5일 있었던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씨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오전 8시 조계사에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려 대기중이던 경찰이 즉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 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월 전역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을 전동차 맨 끝 칸으로 곤봉을 휘두르고 휴대용 최루분사기를 얼굴에 직접 쏘아대며 몰아갔다. 경찰은 학생들을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구타하면서

연행했다. 현장을 목격한 자마자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그의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 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농성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그는 "미군들이 폭행을 해 놓고도 전면부인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의 상태가 나아지는대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별기고>

'준법'이 왜 '불법'인가(2)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편집자 주-이 글은 지난 4월 투고된 글 그대로임을 이해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재의행위가 될 수 있고, 재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소위 준법투쟁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재의행위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까지 불법으로 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재의행위는 물론 근로자들의 숨소리까지도 막고자 하는 억압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부를 우리는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로 구속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훈방했다. 한편, 6일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동국대생 박우영(24)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를 찌러 긴급수술을 받았고, 한양대생 김영용(20)씨는 경찰이 얼굴에 직접 최루가스를 쏘아 2도 화상을 입고 성동병원에 입원, 치료중이 병사유에 관한 법률위반

또한 정부는 단계교섭시에 '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이나, '기업의 양도, 합병, 분할시 노조와 사전합의'등을 요구하며 재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인 정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재의행위가 될 수 있고, 재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소위 준법투쟁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재의행위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까지 불법으로 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재의행위는 물론 근로자들의 숨소리까지도 막고자 하는 억압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부를 우리는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로 구속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훈방했다. 한편, 6일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동국대생 박우영(24)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를 찌러 긴급수술을 받았고, 한양대생 김영용(20)씨는 경찰이 얼굴에 직접 최루가스를 쏘아 2도 화상을 입고 성동병원에 입원, 치료중이 병사유에 관한 법률위반

것이 '준법'의 태도이다. 정 부야말로 '불법'위법'이 아닌 '준법'을 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경솔하게 을 요구하며 재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인 정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재의행위가 될 수 있고, 재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는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소위 준법투쟁에 대한 엄중처벌이란 재의행위 금지 및 제한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취한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까지 불법으로 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결국 재의행위는 물론 근로자들의 숨소리까지도 막고자 하는 억압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정부를 우리는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로 구속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훈방했다. 한편, 6일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동국대생 박우영(24)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폐를 찌러 긴급수술을 받았고, 한양대생 김영용(20)씨는 경찰이 얼굴에 직접 최루가스를 쏘아 2도 화상을 입고 성동병원에 입원, 치료중이 병사유에 관한 법률위반

<이달의 주제- 사회권>

기행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태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 불사' 천명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

서울대교구(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사제 2백여명은 8일 오후 4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긴급 사제단회의를 갖고 '민주화 성지 침탈에 대한 서울대교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충식 신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제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나약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의 전통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가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부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제들은 전통의 상실에 따른 조의를 표명하는 의미로 매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 조종을 칠 것과 △대통령 공개 사과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사퇴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사제들은 8일부터 명동성당 소성당과 성모마당에서 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오후 3시와 8시에 시국미사를 개최하고 13일 대대적인 시국미사를 갖기로 했다. 이어 사제들은 소속된 각 본당에서 강론과 사목활동을 통해 문민정부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한편, 천주교 서울, 인천,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가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소를 난입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앞에 성역은 없다는 그럴 듯한 논리로 언론과 방송에 교회의 입장을 매도하고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단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며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 공권력 투입 비난

민가협은 8일 오후 2시 제 90차 목요일집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한국통신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통신노조 임금국장 박충범씨의 부인 유미숙씨가 나와 그간 가족들이 경찰에게 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유씨는 "구속수배 가족들은 경찰들을 피해 친척집에 피신해 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느끼며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이용범 홍보국장, 단식농성중인 불교인 권위원장 진관승씨가 나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입장을 비난해 3백여명의 참석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목숨 건 단식농성중 삼미 해고노동자들

지난 5월22일부터 삼미그룹 본사앞에서 노조에 대한 33억 손해배상철회와 해고

자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오던 삼미종합특수강 해고노동자 장재홍, 송철원씨등 6명중 장재홍씨는 7일 응급차에 실려 강남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5월 29일 장씨는 사장과 가진 면담에서 회사측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쇠사슬을 목에 걸고 물까지 끊은 상태에서 10여일 동안 고통스런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에 '삼미종합특수강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본사 정문 앞에서 '33억 손해배상철회·해고자 복직약속 이행 촉구대회'를 갖고 △해고자 9명 전원복직 △33억 손해배상 철회 △구속해고노동자 김현준, 이기호씨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지난달 19일 총무로 지하철역에서 미군 8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조정국(28, 상업)씨가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1번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씨는 자필성명에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주장을 대할 때마다 끊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무언의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게 △공식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최소화할 것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미군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17일간 병원생활을 하다가 6일 퇴원했으나, 아직도 미군들에게 맞은 허리가 불편하고, 눈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조씨가 미군사령부 정문 도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남영동 파출소 순경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문제삼아 그를 연행하여 30분 후에 풀어주기도 했다. '주한미군범죄진정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는 9일과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후 조씨의 단식을 지지하는 집회를 미군사령부 정문 조씨가 농성하는 곳에서 갖기로 했다.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등 성명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5.18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8일 성명을 발표, 최전대통령의 용기있는 증언을 촉구했다.

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최 전대통령이 증언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지적하며 "당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내란과 국권탄탈 과정에 대해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 현장 교사 1백여명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중징계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선언한 것 자체를 문제삼다가 교사들이 교육개혁위원회에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접수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따라서 이들이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선언교사의 대표 3인을 포함한 5인의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이 △선언의 철회와 다시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경위서 제출 △문답서 작성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언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발산교 김덕일 교사의 경우 5월5일의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장에 간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데 한번은 김교사가 출장간 사이 김교사의 딸(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방송실로 조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에도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들에게 문답서를 받아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부산교육청은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현장교사가 바라는 교육개혁을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박희옥(여, 40, 명덕국교) 교사에게 5월2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받아가는 등 징계절차

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5월31일 교육대개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 충남과 충북지역의 교사들에게도 징계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 피어선대, 명예훼손등으로

피어선대학교(총장. 조기홍, 경기도 평택 소재) 총학생회(회장 은동원)는 5월30일 학교 교수 50여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수원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동안 피어선대에서는 학교의 비리를 지적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고소, 고발과 제적이 악순환처럼 있어 왔다. 89년부터 불거진 학내비리는 주로 △학교자금 부당산 투기에 전용 △즉발경영체제 △가짜 박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수 채용 △학생운동에 대한 지나친 탄압 등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고소사건은 울초 교수연구실에 오물이 뿌려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교수들이 총학생회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총학생회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등록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해 타협을 하는 중이었지만, 학교측은 모든 대화 창구를 봉쇄하고, 학생회비도 수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 교수 대부분인 50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울초에 이 학교 신학과 김덕기 교수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양심선언을 해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수원=이창연]

● 행사안내 ●

-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6월항쟁 계승과 올바른 지자제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 일시: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금잔디광장
 - 내용: 1부-합동추모제/2부-문화공연(안치환, 류금신, 꽃다지, 노래마을, 민족국패 신명 등 출연, 특별출연-송가대 바라춤)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준비위원회
 - 주관: 유가협(☎: 764-1684)/추모사업회연대회의 등
 - 후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주당/민예총
- 김영삼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10일(토) 오전 10시 / 장소: 종로성당
 - 주최: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747-4364)
- 임금 가이드 라인 분쇄와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
 - 일시: 10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대학로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765-2010)
 - * 행사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 원주 통일만마당
 - 일시: 10일(토) 오후 6시 / 장소: 원주 중앙동 농협 앞
 - 주최: 원주 민주청년회(☎: 0371-731-1364)
- 핵폐기장 즉각 철폐 및 5.20 폭력진압 규탄 인천시민대회
 - 일시: 10일(토) 오후 5시 / 장소: 동인천 인천백화점 앞
 - 주최: 인천연합(☎: 032-874-5431), 환경운동연합 인천지부, 진정추 인천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천지부 등
- 95 공동임투 승리를 위한 인천노동자 결의대회 및 문화공연
 - 일시: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한라중공업(하인천) 앞
 - 주최: 인천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032-422-8178)
- 6월항쟁 정신계승·5월문제 해결·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광주시민 결의대회
 - 일시: 10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조전대 노천극장
 - 주최: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광주 시민대책위원회
- 노동운동 탄압 반대 거리선전전
 - 일시: 10일(토) 오후 / 장소: 마산과 창원 시내 곳곳
 - 주최: 노동인권 마창시민대책위원회
-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단식농성 지지집회
 - 일시: 9일(금) 10일(토) 오후 2시-4시: 서명운동(서울역 광장) 오후 4시 30분-6시: 단식농성 지지 집회(용산 미군사령부 1번 문 앞)
-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 구상 제 2차-사회부문
 - 일시: 10일(토)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제: 통일국가의 사회복지/통일국가의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통일국가의 교육제도
 - 주최: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협의회
- 6.10 민주항쟁 8주년 기념 '희망세' 초청 공연
 - 일시: 9일(금) 오후 7시부터 / 장소: 아주대 노천극장
 - 입장료: 5천원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산하 수원연합(☎: 0331-254-2980)

<오늘은 6월항쟁 기념일>
 성균관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가신 민족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힌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 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운운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

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

매일 시국미사, 촛불시위 천주교, 구체적 행동 개시

천주교사제 50여명은 9일 오후 3시, 8시 명동지하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가졌다. 안중식 신부는 강론에서 “한국천주교회가 그동안 가난하고 억울하며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성소난입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박해받은 자의 편에서 서양심있는 신앙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미사가 끝난후 사제와 평신도 70여명은 성당입구에서 촛불시위를 30여분가량 가졌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김수환추기경)는 9일 명동성당에서 김추기경 주재로 긴급사제평의회를 열고 연이은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사제평의회는 성명서에서 “종교계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6일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교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제평의회는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뜻으로 11일 전국 각 성당별로 명동성당 사태에 대한 경위를 신자들에게 설명하고 13일 명동성당에서 천국의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참석하는 ‘민족화해시국미사’를 갖기로 했다. 9일 천주교광주대교구의 사제단, 정의평화위원회, 평신도사도직협의회등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김영삼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또한, 오는 13일 광주대교구 산하의 81개 성당에 김영삼 정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16일 광주입동성당에서 특별미사를 갖기로 해 명동성당 공권력투입에 대한 천주교의 규탄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망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이던 김영환(29)씨가 9일 새벽 1시 서울 종묘공원 앞에서 길을 건너다 영일용택시에 치어 운명했다. 김씨는 90년 건국대 정외과에 입학, 정의과 학생회장등을 역임했고, 93년 5월부터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빈소는 고려병원(서대문 직접사병원 위)에 마련되어 있으며, 발인은 11일(일) 있을 예정이다.

<알림>

이번주 인권강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은 강사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행형법’(17일, 박찬운 변호사), ‘노동법’(24일, 김선 변호사) 강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룡 병원장,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

태백 장성병원 간호사 성희룡 사건과 관련 노동부는 장수복 전 태백노동사무소 소장을 직위 해제시키고 이영대 전태백노동사무소 소장과 이아무개 보상과장을 경고조치했다. 이어 산계의료관리원(이사장 이홍지)도 간호사들을 술자리에 동원한 간호부장과 병원원장을 8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또한 정선, 장원병원으로 보복인사를 받았던 간호사들은 산계의료관리원으로부터 8일 원직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재차 건의해왔으나 그때마다 묵살당했고 우리 힘으로는 어

려움을 느껴서 부끄럽지만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단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대한간호사협회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대교조성희룡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도 우리사회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성희룡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 오늘 성균관대에서, 중요공원까지 행진도

「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죽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와 「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연대회의」(의장 진관)의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성균관대에서 ‘제6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90년부터 매년 6월항쟁 주간에 열리는 이 행사는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조국통일, 민중생존권보장등을 주장하며 산화해간 열사들과 공권력에 희생된 이등 총 2백41명에 대한 합동추모제다. 유가협에 의하면 이들 2백41명에는 노동자 66명, 학생 55명, 교사 12명, 도시빈민 5명, 청년 11명, 군인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성균관대 금잔디 광장에 2백41명의 영정이 안치될 대형 계단이 설치되며, 행사장 주변에는 이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대자보와 사

진 등이 전시된다. 주최측은 이날의 행사에서 △민족사의 정통성 회복과 군부독재 잔재 청산 △국보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 △노동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지자체 약육음모 규탄 △6월항쟁 정신 계승하여 민주노동 원년,

유해환경에서 작업도중 질식사

안성 이성화학에서, 회사 사인은폐 기도

유독성약품을 다루던 노동자가 약품냄새로 인해 질식사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이성화학 제1공장에서 생산된 CAH라는 약품을 건조기에 말리는 작업을 하던 최영희(34, 대덕면 견지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인 송근영(27)씨가 발견, 인근 병원으

로 옮기던 중 숨졌다. 최씨가 일하던 이성화학은 예전부터 습도 열수 없을 정도의 악취와 유독가스 배출로 인해 근로자의 이직율이 높았고 작업환경이 산업안전법에 저촉되어 경고로 여러차례 받았다. 얼마 전에는 유독성 폐수방출로 공장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최씨의 부인 이모(32)씨는 “평소 남편이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자주 얘기했고 약품냄새를 맡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남편의 죽음을 그 때문이라고 울먹였다. 주변 동료들도 최씨의 사인은 방독면을 쓰고 작업

을 했지만 워낙 작업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유독약품에 질식한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회사측은 사망원인을 방독면의 불량상태로 돌려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의 본질과 보상문제, 회사측의 명백한 산업안전법 위반행위를 회색시킴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두차례 진상조사를 나온 노동부도 더이상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작업환경의 개선을 커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원=이창원]

‘사회주의혁명’조직 적발 경찰, 15명 구속 발표

서울경찰청 보안국은 9일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의 김성식(가명 강혁주, 36, 한양대 물리학과 3년 중퇴)씨등 조직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적 임시정부를 세워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다. 주변 동료들도 최씨의 사인은 방독면을 쓰고 작업

<6.10 전국집회 예정 현황>

지역	시간	장소	집회명칭
서울지역	14:30 15:30	성균관대 마로니에공원	민족민주열사추모제 임금가이드라인분쇄와 부당한 공권력남용규탄 쟁의대회
인천지역	14:00	한라중공업 후문앞	95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문화제
부천시흥	14:00	부천역 광장	김영삼정권의 성소난입규탄과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
경기남부	14:00	수원장안공원	95임단투승리와 전조합원 단합을 위한 문화한마당
경기동부	14:00	성남시청 앞	6.10항쟁정신계승과 지자체 승리를 위한 국민대회
대전충남	14:00		민자당사 항의방문,선전전
충북지역	16:00	상당공원	김영삼 정권 성소난입과 노동운동탄압규탄,6.10항쟁계승대회
전북지역	15:00	전주 코아 백화점	김영삼 정권의 공권력남용규탄과 총력투쟁 결의대회
광주지역	16:00	조선대	6월항쟁계승,5월문제 해결,노동운동탄압분쇄 광주시민 결의대회
부산양산	14:00	부산역	노동운동탄압,공안정국분쇄 부산시민대회
마창지역	14:00	마창전역	가두선전전
대구지역	15:00	대구백화점 (고수부지)	명동성당 조계사 공권력투입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

◆ 인권간행물 ◆

- 한국통신사태 해결의 길찾기-시민의 한국통신만들기 대토론회준비회의
 - 주요내용-한국통신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박석운)/ 시민을 위한 한국통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김삼곤)등. 32쪽
- 「시민과 변호사」 6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 주요내용-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최종고)/미국의 판결-미란다 판결(장호순)/시민을 위한 법률강의(이건호)등. 240쪽, 4천원.
- 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자료집-서강대학교 민주등문회(☎ 745-1516)
 - 주요내용-장의균 동문 헌법소원소견서 1-3차/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경과/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등. 86쪽.
- 「우리소리」 5월호-시설문제연구회(☎ 796-5708)
 - 주요내용-특집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발족>/연중기획-아동복지시설을 생각한다/시설동향-동산원사태, 영남보육원 성폭행 사건/논문요약-사회복지시설의 개방성에 관한 연구(조성희)/시설관련 통계 및 자료모음 등.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헌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헌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의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 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청원을 위해 각계인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대통령

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줄 것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선 대책위는 14일까지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대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헌법과 노동법 준수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 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한동노조 쟁의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는 12일 오후 2시 공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쟁의 발생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교섭기간중 조합지도부에 대한 징계절차중지 △고소 고발 철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사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국통신노조는 쟁의발생 신고 이유에 대해 "공사가 교섭중에 교섭위원을 포함

한 조합간부를 대량 고소고발하고 파면해임등 중징계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단체협약의 기본정신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인 지부장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통신노조는 냉각기간에 준법투쟁을 금지하고 단체복 입기, 리본달기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단체행동을하기로 했다.

한국통신노조는 최병훈 부위원장등 전원 교체된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13일 오후 3시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질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공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발생신고서 제출과 별개로 임금, 단체협상 갱신을 위한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노조와 민주노총(준)은 10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임금가이드라인분쇄와 부당한 공권력남용 규탄대회'를 2만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공판 안내 ○

- 6월 13일(화) 이영두, 국보법, 오후 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서선원(선고),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 10시, 서울형사 합의2부, 422호 조홍영,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 6단독, 423호
- 6월 14일(수) 이중수, 국보법, 오전 10시 30분, 서울형사 합의22부, 425호 진성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형사 합의22부, 425호 송경재, 국보법, 오후 2시, 서울형사 합의22부, 425호
- 6월 15일(목) 박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시, 서울형사 3단독, 317호 김성복, 존속살해, 오후 2시, 서울형사 합의 23부, 319호 유용기(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 6월 16일(금) 최승기(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 4단독, 423호

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

「6·6 교권유련에 대한 범불교도 대책위원회」(위원장 효림승려)는 12일 '불교도 1천80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김영삼 대통령의 참회와 사과 △내무부장관 해임 △국제노동조약 준수를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5일 시국법회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천주교등 여러 종교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12일

명동성당 정오미사에서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에 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추기경은 "도덕적 양심을 물리적 힘으로 압제하려는 현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민정부는 6·10항쟁의 근원지인 명동성당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음에도 결과적으로 모태인 성역을 짓밟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추기경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청소년의 대합창' 문화행사 성황리에 열려

구로시민회, '내게로 열려진 세상의 빛' 주제로

구로지역 23개 단체로 구성된 「구로시민회」는 '가출촌'으로 불리는 가리봉지역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대합창' 행사를 가졌다. '내게로 열려진 세상의 빛을 찾아'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5시부터 구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구로지역의 청소년 4백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3부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는 구로지역의 중고교 학생 동아리들의 문화공연과 <한겨레신문>의 박재동 화백과의 대담,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가출촌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상영, 인기 가수 황규영씨와 노래마을의 공연으로 3시간 30분 동

안 이어졌다. 특히 '빠기(호객행위를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사는 모습과 '2+1제도'의 현장인 공고생들이 공장에서 실습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상영한 장면은 참석한 이들에게 청소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 계기였다.

이 자리에는 학생, 교사, 지역주민등이 참가했는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낼 것이 없는 현실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역상, 구로고, 등에서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물론 행사 참가를 막아 물의를 빚고 있다.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체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경기도 포천군 주민 3백 50여명은 8일 포천군청 앞에서 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포천의료원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지자체 전까지 소각장에 대한 해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분개했다. 93년부터 소각장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달 22일

서장과 포천군수로부터 소각장문제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으나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회사측은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공동대책위" 대표 김부경씨등 주민 7명을 업무방해, 기물파손,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자문위원인 양한승씨에게 신사장의 이름이 나온 유인물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뜻대 신격호회장의 조카인 신사장이 포천 병원적출물건설승인에 신회장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소각장건설에는 정·재계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마포경찰

한편 지난 4월 15일 시공회사의 공사방해혐의 고소로 구속중이던 김호경씨와 김원영씨는 1심재판에서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6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민 80여명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주간/인/권/흐름

(6월5일-6월11일)

<6월5일>
현대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제출/서울대, 한양대 병원노조 쟁의발생 신고/한국통신노조, 교섭위원 새로 구성하여 회사와 협상 제안, 종교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베트남 난민 4천여명 강제송환 중지 촉구, 말레이시아에서 수용소 탈출 시위/독일, 옛 소련 주민중 나치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하기로

<6월6일>
경찰, 한국통신 노조 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병력 투입, 노조간부 13명 연행/서충원 학생 80여명, 일본 전의상 망인 규탄,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투척, 경찰 58명 연행/헬무트 콜 독일 총리, 이스라엘 학살기념관 관람후 "나치학살은 독일인 수치"라고 말해

<6월7일>
경찰, 명동성당에 다시 병력 투입 30여명 연행/노동부, 장성병원 간호사 성희롱 사건 관련자 3명 직위해제/서울중계동에서 철거반원이 행패 말리던 목사 부인 성주행/한총련,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규탄 거리시위

<6월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단 2백여명, 「성지침탈에 대한 서울대교구 대책위원회」 구성, 농성 돌입/일본정부, 종군위안부에 의료와 복지사업비 부담키로/박정아씨,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가 수사 도중 "박창희씨 폭행했다"고 고발/5.18기념재단, 최규하씨 고발 서명운동 추진/서울지검 형사부, 실행 선고 미군속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밝혀/미군에 폭행당한 조정국씨 주한미사령부 앞에서 단식농성

<6월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평의회, 경찰난입 대통령 사과 요구/군경지원대책위 간사 김영환씨 교통사고로 운명/노동부, 노동쟁의 잦은 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진단키로/경찰청,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 15명 구속/민주당 최옥철의원, 정부가 추곡수매와 관련된 집단시위 유공경찰 표창 폭로/동두천에서 미군에 주민들 폭행당해/서울지검, 충무로 지하철역 폭행 미군 2명 기소/변협, 최규하씨 증언 촉구 성명 발표/일본 의회, 전후 50주년 결의문 채택

<6월10일>
'제6회 민족민주월사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8주년 기념식/민주노동준비위,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운동단합규탄대회 가제

<6월11일>
김수환추기경 미사집전하며 강론중 경찰투입 유감의 뜻 밝혀,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책위 확대개편

해설
지난주에는 공권력의 오만함과 폭력을 절감했던 한 주였다. 경찰은 '불법에는 성의 없었다'는 구호와 함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문민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현정부의 오만함은 종교계가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중재를 하는 동안에 이루어져 더욱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종교계는 총력을 기울여 항의를 하고 있고, 마침내는 재야인사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헌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국의 흐름은 지자체 선거국면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또, 지자체 선거한다고 한국통신 노조가 의롭게 싸우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근 조>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 양봉수씨 분신 32일만에 운명! 양봉수 해고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한영환(현 인천시위원), 안경욱(14대 총선출마), 성회직(현 강원도의원)등 6.27 지방선거에 출마한 노동계와 진보진영 후보자 93명은 13일 오전 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정부의 위헌, 탈법적 노동운동탄압과 교권유린에 즈음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해나갈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조의 기본급 8만원 인상요구는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며 통신민영화의 문제도 노조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구속조치 및 한국통신측의 대화회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쫓기는 자들의

피난처인 종교의 성지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교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이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죄'라고 발언한 것이 "국민기본권을 수호해야할 국정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노동준비위', '부당한 공권력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연대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준비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95년 1월부터 6월6일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57명, 수배자는 81명이다. 이중 한 국통신과 관련되어 구속·수

배된 노동자는 전체의 반을 넘는 65명으로 나타났다.

분신노동자 양봉수씨 사망 현증에 공권력 투입 예상

지난 5월12일 분신한 현대자동차 해고 노동자 양봉수(32)씨가 13일 사망함에 따라 울산지역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양씨는 분신 32일만인 13일 오전 7시45분경 입원중이던 대구 동산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시신은 동산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양씨는 그동안 몇번에 걸쳐 고비를 맞았고, 13일 오전 새벽 3시에도 고비를 맞아 전기충격으로 겨우 소생했지만, 끝내 오전을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인권하루소식> 5월13일자 참조).

양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한때 병원을 1천명이 넘는 병력으로 에워쌌고, 이 과정에서 병원에 들어가려던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이을숙 동산병원 노조위원장, 이정호 현대자동차 해고자 등 5명을 연행하여 조사하고 있다. 양씨의 유가족중 여동생 양경자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변인을 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 요구집 목사와 현대자동차 채규정씨로 정한다고 밝혔고, 장례 절차는 가족들과 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봉수씨의 죽음에 힘썼지 않도록 할 것과 공

권력의 철수를 요청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이날 경찰이 현대중공업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중인 현충련의장 윤계진(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씨를 연행하려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이 비상농성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정공 노조는 오는 16일 쟁의발생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양씨가 사망함에 따라 장례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오는 19일(월) 양씨 추모제를 울산지역 차원에서 갖기로 했다. 양씨의 분신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텃농성을 주도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 중 13명이 구속되었고, 수배된 노동자는 12명이었다(<인권하루소식> 5월20일자 참조).

한통 노사 임금협상 재개

한국통신 노사는 13일 단체교섭회의를 열어 노조측이 제출한 임금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의 협상은 단체교섭이 중단된지 28일만에 열린 것이다. 한국통신 노사의 제5차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에서는 이준 사장이 직접 나섰으며, 노조측에서는 유덕상위원장으로 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은 최병준 부위원장 서리가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단체교섭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앞으로 1주일에 본회의와 실무소위 회의를 각각 2번씩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천주교 2만여명 공권력 투입 항의 미사

명동성당에서 두차례, 촛불시위도 가져

정부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 한국통신 노조원을 연행한 것에 항의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천주교 내에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광주, 수원등 지방교구 사제·수도자·평신도 2만여명은 13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성역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김옥균 주교(서울대교구총대리)의 집전으로 가졌다.

이날 미사에서 최창무 주교는 "현정부가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할 성역을 파괴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교회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측은 20일까지 국정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가 없으면 명동성당에서 20일 대규모 미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미사가 끝난후 사제·수도자·평신도는 촛불집회에 이어 촛불 침묵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종 신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미사와 시위에 임했다.

현재 명동성당에는 공권력 투입에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여m의 검은색, 흰색의 휘장이 내걸어 있고 천주교서울대교구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소속 평신도들이 항의농성을 6일째 벌이고 있다. 이날 미사에는 '민주노동준비위', '민주주의민중동맹전국연합' 회원들도 참석했다.

전기협 의장 서선원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6월 철도파업

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피고인(30)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 AI 한국지부 워크샵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외국의 인권교육 현황 및 국내 단체들의 현수준을 알아보는 워크샵이 10,11일 대전 퍼카호텔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렸다. 인권교육에 대한 서로

의 관심을 확인하는 첫 자리였던 이번 모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NCC인권위 등 6개 단체 15명이 참석했다.

워크샵은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의 '현시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류은숙씨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방관하거나 교육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며 서구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10월초 △인권교육의 방향성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 상황 분석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습 △초·중·등 교과서와 외국교과서 분석 등을 내용으로 2차 워크샵을 갖기로 했다.

자원점검 △활용가능한 외국 자원점검△각 단체 협조체계 모색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단체 대부분에 인권교육 전임자가 있고, 인권교육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몇 단체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인권교육 발간과 공개강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간의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샵이 인권교육 활동모색을 위한 첫 모임이라는데 의의를 두며,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10월초 △인권교육의 방향성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 상황 분석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습 △초·중·등 교과서와 외국교과서 분석 등을 내용으로 2차 워크샵을 갖기로 했다.

<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건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삼미그룹 본사 앞에서 창원 삼미특수강의 해고노동자 6명이 23일째 본사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성중 해고자 장재홍씨는 지난 7일 병원에 단식으로 인해 입원했다가 3일만에 퇴원해 다시 농성장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92년 9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동결과 인원감원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회사측은 이것이 노조의 불법집회라며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공청회를 방해했다. 평소 회사의 강압적인 노사관리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은 항의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 조합원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15일동안 벌인 파업은 공권력 투입과 20명 구속, 15명 고소·고발, 1백33명 징계위원회 회부로 마무리 되었고, 회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35명을 해고시켰다.

이들이 본사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3년 텃농성을 했을 당시 삼미그룹 김형배 사장의 "계열사 3년 근무후 원직복직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2개월만에 농성을 풀고 창원으로 내려갔지만 약속은 달라졌다. 다시 회사측은 "사표를 쓰면 손해배상 취소는 물론 생계를 위해 금전적인 도움도 주겠다. 사표를 써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이 내놓은 계열사 3년근무안도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본사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삼미특수강의 사장은 "다른 계열사와 관련된 것은 자신이 관리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며 발명을 했다. 이뿐아니라 회사측은 파업당시 손해액이 90억이라며 이중 33억의 손해배상을 해고자 10명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92년 당시 해고자는 35명이었으나 대부분이 회사의 요구대로 사표를 썼고, 현재 9명의 해고자가 순수한 원직복직의 희망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농성중인 해고자들은 지금 창원공장 조합원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고 전했다. "회사도 독하고, 해고자들도 독하고, 노조도 독하다. 단식농성하는 데도 대꾸도 없는 회사, 쓰러지지 않고 23일이나 버티고 있는 해고자들, 그것을 보고도 꿈쩍않는 노조, 참말로 독하다."

정말 이들은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건디고 있었다. 처음 시작할때 '얼마나 가겠냐, 해결될수 있을까'는 생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을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후회없는 싸움을 해보자'는 굳은 의지가 생긴다고 한다.

95년 구속·수배 노동자 현황

(6월6일 현재)

자료제공: 민주노동 준비위

소속	구속자	수배자
대흥기계	3명	
우신공업	5명	
서울지하철		1명
금호타이어		1명
한국통신	19명	46명
유성기업	1명	
해고노동자	9명	
현대그룹노조총연합		3명
현대중공업	2명	2명
현대자동차	13명	12명
민주노동(준)	1명	2명
마창노동조합연합		1명
서울노동조합협의회	1명	
부천시흥민주노동(준)	2명	
전국노동운동협의회	1명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명
총 계	57명	81명

<근 조>

분신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운명!
양봉수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유엔인권위원회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씨가 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의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을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등 인권단체들은 최초로 방한하는 유엔특별보고관을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지금까지 일본 중군위안부 문제로 유엔인권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방문한 적은 있으나, 국내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지난 5월 22, 23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자문회의'(자문회의)에 참석한 아비브씨는 인권협 대표자격으로 참가한 조용환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체제가 이행기에 있는 나라, 정치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나라를 각각 선정하여 문제점을 보려 한다"며 한국을 방문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된 이론으로 전개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과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한을 동시에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권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

광주 증언 미루면 역사의 죄인

5.18 국민위 최전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전달

5.18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7월중 종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는 14일 오전 11시 최규하 전대통령 자택을 방문,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마포구 서교동의 최전대통령 자택을 찾아간 5.18국민위의 김상근 대표와 집행위원들은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통고를 받고, 자택 맞은편 비서실에서 최홍순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 전대통령의 증언이 중요하고, 이에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거듭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증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최 비서실장은 "최

서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점 △유엔인권위 위원국으로서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인 것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으므로 비교적 무난한 주제의 보고관을 초청, 더 심각한 문제의 보고관의 방한을 막기 위한 것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이용한 공세를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아비브씨는 인도의 경제 관료를 두루 거친 저명한 경제학자로 90-92년 주미 인도대사를 역임했고, 93년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일반적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역사, 철학, 종교, 인권, 국제문제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의 활동으로 각각의 인권단체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권단체도 방한 노동권등에 대해 조사

「Human Rights Watch」의 리차드 디커씨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12일 방한,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에서 침해받고 있는 노동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이며 민주노총(준), 인권협, 참여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게 된다. 이와 함께 5월 한달동안 광주지역에서 벌인 '기소촉구범서보내기운동'을 통해 접수된 1만3천여통의 범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봉수씨 '노동자장'으로,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

한국통신노조 문제로 인해 종교계의 항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양봉수씨의 장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현대그룹, 노동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 대표단과 양씨의 유가족들은 회사측에 노동자장을 보장할 것 등 11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회사측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장례는 노동자장으로 치루기로 하고, 장례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노조원, 노동계 대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장례식은 분신현장, 작업현장에서 갖기로 하였다. 또한, 회사측에 대해서는 △정성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일간지에 양씨의 해고와 분신에 대해 사과 광고를 실을 것 △양씨의 명예회복 △분신관련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고소, 고발 철회 △치료비 일체 부담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의 유가족과 현총련 대표단은 이를 이날 밤에 회사측에 제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현총련 협상대표단으로는 오규섭 목사, 채규정, 권처홍씨, 윤인섭 변호사가 맡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가족장으로만 하면 유가족의 요구를 대폭 들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산병원과 영안실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14일 오전 영안실에 설치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김형계 대구노련 조직부장, 강희철 동산병원 노조 조직부장 등 6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현대정공 노조의 오석훈씨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 대구 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오전 11시 30분경에는 사복형사들이 포커를 치던 광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노동자에게 사복형사 10여명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는 난동을 부렸다.

양씨의 시신의 입관을 13일 오후 마쳤고, 현총련과 민주노총준비위 소속 노숙자 석방, 수배해제, 고소, 고발 철회 △치료비 일체 부담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의 유가족과 현총련 대표단은 이를 이날 밤에 회사측에 제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현총련 협상대표단으로는 오규섭 목사, 채규정, 권처홍씨, 윤인섭 변호사가 맡았다.

문 앞에서 연행된 「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지협의회」의 장 설종남씨는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취업설명회에서 "한국통신노조가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진입한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요인암살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 얻었다고 말했다.

노동단체 실무자 고문당해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

지난 8일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가톨릭노동자의 집」(대표 최연례)의 교육국장인 김용진(29) 씨를 긴급구속장으로 연행했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에서 상당수의 자료를 압수해갔다. 가족들에 따르면 첫날 김씨는 잠안제우기 고문을 당했고 현재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보안수사대는 김씨가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작성한 교안에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노동자목회전국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노동운동 탄압중지와 김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동노조 북한 사주 받아 박총총장 또 망언

「한국통신노동조합」은 14일 박홍(서강대)총장의 "한국통신노조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5만3천여 조합원 전부가 명예훼손죄로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총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통신 노조의 평화적 대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탄압으로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취업설명회에서 "한국통신노조가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진입한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 이들은 요인암살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원을 통해 얻었다고 말했다.

학칙에 성희롱 방지 촉구 서울대 총학생회 학교측에

「서울대 조교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교총학생회」는 14일 서울대 이수성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총학생회는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당국은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학칙의 제정 △상담전화와 신고접수센터 개설 △진상조사단 구성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요구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1회)

행형법-감옥제도의 개선방향

강사: 박찬운(변호사)
일시: 6월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오늘 사안법 손배소송 선고

한택렬씨등 장기수 29명이 91년 청구한 사회안전법 관련 민사소송 선고가 1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에서 열린다. 서씨등은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씨의 시신의 입관을

13일 오후 마쳤고, 현총련과 민주노총준비위 소속 노숙자 석방, 수배해제, 고소, 고발 철회 △치료비 일체 부담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씨의 유가족과 현총련 대표단은 이를 이날 밤에 회사측에 제시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현총련 협상대표단으로는 오규섭 목사, 채규정, 권처홍씨, 윤인섭 변호사가 맡았다.

양씨의 시신의 입관을 13일 오후 마쳤고, 현총련과 민주노총준비위 소속 노숙자 석방, 수배해제, 고소, 고발 철회 △치료비 일체 부담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13일 연행된 이들에게 출옥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 조>

분신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운명! 양봉수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일본정부가 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가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등 지원 △위안부 관련자료를 정리,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기분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여연'등 23개 여성단체는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국가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해온 이 계획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정부의 국가적사죄와

사회안전법 소송연기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강종쾌)는 한백렬씨등 출소장기수 29명이 낸 손해소송 선고를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배상이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다.

한편, 한국 외무부는 14일 '우호기금'계획에 대해 "일본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공격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정부 참회없이 용서할 수 없다

6.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

지난 13일의 명동성당 시국미사에 이어, 공권력투입과 현정부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시국법회가 15일 7시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불교도, 한국통신노조원, 노동운동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효림, 명진 승려의 타종과 함께 시작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송월주 승려가 참석하여 "허탈함과 참담함을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고 문민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송총무원장은 법회에서 "정부 최고책임자는 청정도량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과 전 불교도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며 다시는 이와 같이 성역을 유린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또한 "구속된 한국통신 노조원들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승려와 신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

며 조계사에서 파고다공원까지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날 법회는 41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한 '6.6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도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조계사 경내에는 '김대통령 사과'와 '구속노동자 석방' '노사자율협상보장' 등을 요구하는 오색의 만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고 양봉수씨 추모 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남 목사)는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고 양봉수씨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15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회관에서 가졌다. 홍근수(향린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유엔 회원국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철폐를 촉구했으며,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침묵한 분위기 속에서 고 양봉수씨를 위해 기도했다.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일집회에서

15일 민가협은 91차 목요일집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경찰폭력을 다루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본문화원 사건' 관련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무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경찰이 시위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안국동 지하철역에서 벌인 폭력 사건의 책임자인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지하철노조는 "기관사를 협박하여 달리던 전철을 멈추게 하고 최루탄 난사,유리창 파손등 공무집행을 이윤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의 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1회)

행정법-감옥제도의 개선방향

강사: 박찬운(변호사)

일시: 6월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한동노조, 박홍총장 고발기로 한림대 북한 사주 발언에 강력대응

박홍 서강대 총장이 14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수요세미나에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통신노조는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전 조합원들의 박홍총장에 대한 규탄서명을 16일까지 지부장의 책임하에 완료하고, 각 지부별로 16일에 <한겨레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또, 서명을 취합하여 박홍총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회사와 공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교섭위원 등 64명이 구속, 수배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성당과 사찰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를 북

한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박홍총장의 발언은 한국통신노조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홍총장은 발언의 근거를 밝힐 것 △검찰은 박홍총장의 발언진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 △박홍총장은 발언의 정확한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림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발표, "박홍총장의 발언에 분노하며 박홍총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주사와 발언 시리즈로 악명높은 그를 수요세미나의 강연자로 초대 한림과학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임이다

지하철노조 파업 결정하자 정부 곧바로 직권중재

서울지하철 노조는 14일, 천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지하철공사가 핵심요구사항 대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2일 오후2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교섭을 보장한다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냉각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직권중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들어가면 노조는 중재회부 효력이 발생하는 보름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중 파업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불법이 된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앞으로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충련 본사 항의방문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충련) 간부 30여명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현대그룹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정세영회장은 끝내 만나지 못했다. 현대그룹측은 "정회장이 매우 바쁘다"고 했으나, 현충련측은 "현충련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분신·사망한 양봉수씨에 대한 묵념 후 성명서를 낭독하고 침묵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이들 현충련 간부들은 해고자 복직과 성실교섭의 촉구, 양씨의 장례식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 행사안내 ○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
· 일시: 6월16일(금) 오후6시
· 장소: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층 1-B호
· 문의: ☎ 745-5872

□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발족식
· 일시: 6월17일(토) 오후3시
· 장소: 대구 YMCA강당
· 문의: ☎ 053-566-2409

□ 가정폭력-그 해결의 다각적 접근
· 일시: 6월17일(토) 오후2시
·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 주최: 대한가정의학교육자협의회(☎ 320-1440)
· 내용: 여성사회학적 접근(신혜수)/법적 제문제(양정자)/가정윤리학적 접근(김길락)/의료인과 가정폭력(금병화) 등.

□ 전국대학민주등문회협의회 창립대의원대회
· 일시: 6월18일(일) 오후2시
· 장소: 성균관대 심산관 4층

□ 양봉수열사 정신계승 추모집회
· 일시: 6월19일(월) 오후5시30분
· 장소: 울산 일산해수욕장
· 주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0522-36-0771)

□ 인천시장후보 3인초청 '핵공청회'
· 일시: 6월19일(월) 오후2시
· 장소: 인천 만수1동성당
· 주최: 인천야마다해폐기장대책범시민협(☎032-655-6202)

□ 인권법당 '김상사, 개원식'
· 일시: 6월20일(화) 오전10시
· 위치: 정독도서관 맞은편 4층 붉은 건물
· 문의: 김상사(☎734-6401)

□ 성역회복을 위한 2차 시국기도회
· 일시: 6월20일(화) 오후7시
· 장소: 명동성당

□ 교육개혁서고사토론회
· 일시: 6월21일(수) 오후7시
· 장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주최: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모임(☎233-7963)
· 순서: 교육과 교사의 역할/학교교육개혁 3대과제/종합생활기록부의 모델과 운영방안/자립형 사립교의 문제점과 극복방안/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문제

□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 실무자·자원봉사자 수련회
· 일시: 7월1일(토)-3일(월)
· 장소: 대성리 남사당
· 주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765-2010 윤우현)

◆ 동 정 ◆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가 해화동에 있던 사무실을 종로 기독교연합회관으로 옮겨 8.15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와 같이 사용한다. 이사한 사무실의 주소는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층 1-B호, 전화번호는 745-5872.

<근 조>

분신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운명!
양봉수씨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체 앞두고 구속자 급증

정부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에 대한 탄압을 강화,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가 16일 발표한 을 5,6월 월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5월1일-6월10일까지 41일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1백61명으로 하루 평균 3.92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각 대학 총학생회, 노동조합, 언론보도, 법원, 구치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집계한 것이다. 이는 1월-4월까지 총 구속자가 1백4명 이었고, 3,4월 구속자가 각각 33명과 34명인 것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다(아래 표 참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송소연(30)씨는 "공안 당국이 이미 해체된 조직의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비난이 되고 있는 제3차 개입금지 이유를 구속자를 양산하는 것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국을 경색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나아가 "월말 방한하는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6월10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34명으로 밝혀졌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4백64명이다.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전체 구속자의 64.6%인 3백명으로 집계되었다(노동자 구속자 현황은 <인권하루소식> 6월14일자 참조).

<6월10일 현재 구속자 현황>

직업별 분류 (단위: 명)

총계	학생	노동자	장기수	농민	제야·기타	군·경
464	159	88	75	1	107	34

적용법조별 분류(단위: 명)

총계	국가보안법	집시·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노동관계	군·관계
464	300	63	41	70	3
	64.6%	13.6%	8%	15.1%	0.6%

95년 월별 구속자 (총 265명/국보법 117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구속자	12명	25명	33명	34명	94명	67명
국보법	8	19명	22명	11명	41명	16명

“끝없는 망언,
박총장님 물러나시오”
서강대총학생회, 단식농성

“한국통신노조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한국통신노조로부터 고발을 감수해야 하는 박총장 서강대 총장이 이번에는 서강대 학생들에게 총장직 사퇴를 강요받고 있다.

16일 「서강대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성필)는 「박총장 총장 망언규탄대회」를 갖고 전국민에 대한 사과와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신경훈 씨 등 학생 11명이 학내 도서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학생회는 “6·27 지자체 선거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앞두고 또 한번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위망동”이라고 항의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작년 박총장의 주사과

발언에 대해 학생들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총장을 둔 것에 모두 창피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박총총장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17일 총학생회는 「한국통신노조」와 함께 「박총총장 망언규탄 및 퇴진을 위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양봉수씨 유가족에 조건
필리핀 급속노련

「국제급속노련 필리핀연맹」은 14일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고 양봉수씨의 가족들 앞으로 조문을 보내왔다. 이들은 “양봉수씨의 회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양씨의 죽음은 회사의 강압적인 노동정책에 대항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제급속노련은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산별노조연맹중앙 장 강력한 노동조합조직이다.

95년 5·6월 국보법위반 조직사건 구속자

사건명	연행일자	연행자수	구속자수
고려대 반미불패	5월15일	8명 (군인4명)	7명 (1명무혐의)
부산 빛나는 전망	5월15일	18명 (군인5명)	12명(7명불구속) 1명(6월9일 추가구속)
성균관대 인민학원	5월16일	4명 (군인4명)	4명
원광대 구국지구대오	5월30일	7명 (군인3명)	6명 (1명불구속)
전남대 민족사랑연합	5월30일	6명 (군인2명)	5명 (1명불구속)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6월9일	15명	15명

(자료제공: 민가협)

최규하씨, 증언 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6일 오전11시 최전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비서실에 5.18광주항쟁에 대한 증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증언거부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전직대통령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전대통령측은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역사적 선례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도 지난 14일 최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증언촉구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탄핵 서명 대중화
노동인권대책위, 오늘부터

「부당한 공권력 남용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7일 이창복, 고영구, 유완규씨 등 각계 인사 1천5백여명에게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7-22일까지 본격적인 대중서명운동을 펼치고 20일에는 국회의원을 위해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앞으로 사회단체로 대중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7일 치뤄질 ‘고양봉수 열사 추모집회’를 계기로 청원운동을 널리 확산하기로 했다.

위기모면하려는 교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최근 공권력의 과잉유린 사태와 관련 “국민과 함께 유감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전대통령측은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역사적 선례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도 지난 14일 최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증언촉구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여성의 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21회)

행형법-감옥제도의 개선방향

강사: 박찬운(변호사)
일시: 6월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을 중심으로 ‘법정 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정 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은 대학생들에게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크게 △여성폭력 현실과 여성 관련법에 대한 강의 △가사계관 모니터 △피해자 상담지원 △고소장 작성 등 필수 요령 등이다. 교육일정은 7월 18일부터 8월18일까지 주2회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6-8시. 관심있는 사람들은 7월6일까지 이력서 1통, 재학(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여성의 전화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269-2962 조유경 간사

●행사안내●

- 고 양봉수 열사 추모집회
· 서울: 오후2시, 탑골공원, 집회후 계동 현대그룹 본사까지 행진
- 인천: 오후2시, 동암역 광장
- 마산: 창원: 오후6시, 창원 중앙체육공원
- 부산: 양산: 오후3시, 부산서면 천우장
- 대구: 오후4시, 대구백화점 앞
- 울산: 오후3시, 유리원백화점 앞
- 「서울의 정치」 출판기념회
· 일시: 19일(월) 오후2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 주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화: 796-8364)

◆ 인권간행물 ◆

- 「함께가는 여성」 6월호 -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진단-96년도 교육개혁안/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결심공판을 지켜보고/우리직장이야기-이랜드의 부당해고 고발 등. 20쪽.
- 「저 평등의 땅에」 5월호-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752-8308)
· 주요내용:아이들에게 이런 만화 어떨까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란? 등. 17쪽.
- 범민련 자료집 5-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본부(☎ 745-5872)
· 주요내용:95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의 과제/범민족대회의 역사와 의의/8.15 민족공동행사에 대하여 등. 68쪽.
- 건설일용노동자 6월호-서울건설일용노동자(☎848-9190)
· 주요내용:조합이 왜 필요한가?/통일을 여는 노동자들 발족/알아들시다-채불임금에 대하여 등. 14쪽.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18호-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393-4662)
· 주요내용:「고난함께」의 기도와 영성/효도나들이 참가기 등. 22쪽.
- 국가보안법, 그 악법의 장벽을 넘어-노동청년회(☎717-2330)
·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인권문제/문민정부, 그 허구를 드러낸 1천10명의 양심수/법적용의 원칙/연행, 초기수사에 대처한다 등. 46명.
- 「기사연소식」 13호-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12-3317)
· 주요내용:코펜하겐과 한국교회(이선태)/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김창수) 등. 81쪽.
- 수난받는 여성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보편성과 불가분성/전쟁과 여성/위험에 처한 여성들/여성인권을 위한 캠페인 등. 10쪽.

<근 조>

해고노동자
양봉수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문민경찰’ 고 양봉수씨 유골탈취

화장 끝나자 경찰 투입, 유가족·노동자 격렬한 몸싸움

경찰이 분신·사망한 노동자의 유골을 탈취하여 강제로 장례를 치르게 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하여 분신한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의 유해는 사망 7일만인 19일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주변 동료 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화장된 뒤 강물에 뿌려지게 되었다.

양씨의 유가족은 18일밤부터 19일 새벽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회사측과 장례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을 마친 유가족들은 “장례에 관한 전권을 양씨의 당숙인 양희열 변호사(회사측 담당 변호인)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가족들이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사는 유가족에게 위로금 2억과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경부터 대구 동산병원에서 경찰병력이 대거 증강된 가운데 진행된 발인에서 영안실을 지키던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길’을 부르며 오열했으며, 발인을 마치고 운구차에 타려 하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심하게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경찰의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운구차가 오전 9시30분경 화장터인 대구 경산의 대구 공원묘지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병력 1천여 명을 화장터 주위에 배치했으며, 낮 12시경 화장 절차가 모두 끝나고 양씨의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은 양씨의 유골을 양산 솔밭산공원에 묻히지(연립자주-91년 이후 영남지역의 민족민주운동가들이 묻히는 곳)로 옮기려고 했으나 경찰측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때 현대자동차 노조원 30여명, 대구 노동자 50여명이 1천명의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채규정씨등 다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고, <주간노동자신문>의 사진기자는 사복경찰에 연행되었으며, 경찰들은 유가족에게 까지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경찰은 현대자동차 버스에 유가족들을 강제로 태우고, 사복경찰이 탄 버스 3대와 전경차량 5대가 뒤따르며 목포로 향했다.

오후1시 화장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구노련의 박용선씨는 “우리가 힘이 없어 양봉수 동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오늘과 같은 분통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을 다짐했다.

19일 오후 9시 현재 고 양봉수씨의 유해는 목포 영상강 하구언 등에 뿌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5시30분 잔업을 거부한 현충련 소속 3천여명의 조합원들은 울산 일산해수욕장에 모여 ‘고양봉수열사 추모집회’를 가졌다.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김승훈 신부, 이돈명 변호사등 7명은 19일 오후3시 안우만 법무부 장관을 만나 장기수 석방과 변호인 접견문제를 논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사건 수감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장기수 사면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변호인 접견은 본인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작간첩’사건 신귀영씨 15년만에 만기출소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부산신씨 일가 사건의 신귀영씨가 지난 17일 전주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씨 일가 사건은 일본거주 친형 신수영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그간 가족과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등 인권단체에서 조작되었음이 명백하며 석방을 주장해 왔다. 같은 사건의 서성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씨는 89년 출소, 현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에서 재심준비를 하고 있다.

공판 안내

- 6월 20일(화)
 - 합평기(속행), 국보법, 오후5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 6월 21일(수)
 - 박순봉(속행),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 합의3부, 319호
 - 박치현(속행),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 6월 22일(목)
 - 양을모(선고), 노동쟁의조정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4부, 418호
 - 서준식의 35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민사 합의41부, 562호
 - 성명규등 3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 조상현등 2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3부, 319호
 - 장상환·정진상(“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형사 합의2부, 대법정

주간/인권/흐름

(6월12일-6월18일)

<6월12일>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분신 32일만에 사망/노동인권대책위, 김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작업 돌입/천주교등 4개 종단 교적자 대표들, ‘성소난입 종교인 1천인 선언’ 발표/서울지법 서부지원, 경찰 조사 조작으로 구속된 동국대생 구속죄부심에서 석방

<6월13일>

최병모 변호사, 비밀접건권 침해 손배소송 제기/한국통신 노사, 한달만에 협상재개/천주교, 명동성당에서 2만5천여명 모여 시국미사/대북전단용 풍선 폭발, 인천대생 4명 중화상/민주노총(준), 올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 발표/필리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배상요구 시위

<6월14일>

대구교육청, 교육개혁건의 교사 3백83명 무더기 정계/5.18 국민위원회, 최규하씨 증언 촉구 서한 전달/서울지검 강력부, 마약혐의자 정신병원에 13일간 강제입원/박홍 서장대 총장, “한국통신 노조의 명동성당과 조계사 농성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 발언/유엔, 지구 사막화 1억명 위기 발표

<6월15일>

한국통신노조, 박홍 서장대 총장 고소하기로/민주노총(준), 19-24일 동시파업 돌입하기로/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지하철 재의 직권중재 요청/법불교도대책위, 승려등 2천여명 조계사에서 시국법회/정대협등 23개 사회단체, 일본정부의 위안부 민간기금 철회 요구 성명 발표/현대중공업 노조, 회사와의 임금협상안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

<6월16일>

민가협, 5월부터 평소보다 3-5배 시국사범 급증 발표/대법원 형사2부, 「즐거운 소설」 저자 마광수 교수 유죄확정/이홍구 국무총리, 명동성당과 조계사 경찰력 투입 유감 밝혀/천주교·불교, 이홍구 총리 발표 비난/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보고서 작성 드나/종교계, 최규하 전대통령에 증언 촉구 서한 전달

<6월17일>

노총이 ILO 총회장에서 들린 한동·현대자동차 사태 비난문건, 정부 요청으로 노총 작성·배포 밝혀/천주교전국사제 대표모임, 20일까지 대통령 사과 요구/광주지검 특수부 이충호 검사, 광주북부에서 무고한 혐의로 24일간 구속된 피의자 무혐의 석방

<6월18일>

검찰, 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분석’ 보고서 관계자 소환 수사 착수/러시아, 체첸전투 휴전선언, 체첸 게릴라 인질 4백여명 석방

<해설>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종교계의 규탄이 기독교와 원불교등 전체 종교계로 확산된 한 주였다. 이홍구 총리의 ‘유감’ 표명은 오히려 그 진실성에서 더욱 종교계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범종교계의 정부 규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신했던 현대자동차의 양봉수씨가 운명했고,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민가협은 정부의 학생, 노동운동권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으로 평소의 3배 이상의 시국사범이 양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까지 강제입원시키는 일마저 일어나 인권침해는 심히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한 주였다.

북지관에서 북지사 해고 광장복지관 내규위반으로

「광장사회복지관」(관장 오지은, 북지관)은 16일 정계위원회를 열어 법인 북지1과 수익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홍기순(24, 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거주)씨를 내규위반으로 해고했다. 북지관 측은 홍씨가 명령불복종과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고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복지관의 내규 미공개, 변 아무개 국장의 여성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수익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시켰다”며 오늘 중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홍씨는 지난 2월1일 광장사회복지관에 입사하였다.

박창희(63, 한국의대 사회학과)교수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후 잠안재우기, 구타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문제로 박씨의 딸이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 양심수후원회 발족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공동대표 김상기등 4명)가 17일 대구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1년2개월의 준비를 통해 태어난 후원회는 앞으로 지역의 양심수와 출소장기수를 돕고 발달 소지도 발행할 예정이다. 주소: 대구시 서구 내당3동 888-3 4층 전화번호: 053-566-2409

불교인권위 인권법당 오늘 집들이 예뻐

불교인권위가 종로에서 안국동 인권법당 ‘길상사’로 사무실을 옮기고 20일 오전 10시 새 사무실에서 길상사 개원식과 함께 집들을 갖는다.

위치는 안국동 정독도서관 맞은편 붉은 건물 3층이다. 전화번호 734-6401 팩스 734-6402

<바로잡습니다> 17일자 ‘박홍총장’ 관련 보도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은 서장대 총학생회와 함께 집회를 갖기로 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로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근 조>

해고노동자 양봉수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조용화학 염산가스 누출, 주민들 항의농성 회사 무대책으로 일관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공장측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우성미성아파트 주민 4백여명은 19일 밤9시부터 세시간 가량 조용화학 정문 앞에서 염산가스누출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조용화학공장의 이전과 유해

가스누출 책임자처벌, 인근 주민의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용화학은 사카린과 이스트 원료 제조업체로 공장시설이 낡아 자주 가스를 배출해 왔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염산가스의 일종인 클로로실폰산 가스가 누출되어 주민 2천여명이 대피하고 인근 신도림중학교가 단축수업을 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주민들은 조용화학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대책마련은 커녕 사장 면담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농성을 벌이게 되었고,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직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주민 오영라씨는 가스배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평소에도 기관지염, 결막염 등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앓는 주민이 많고 아이들은 감기에 자주 걸리며 잘 낫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신도림동 일대에는 조용화학 외에도 한국타이어, 종근당, 삼영화학 등 대형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 공해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이 심각히 침해받아 온 지역이다.

영산강에 유해 뿌려 고 양봉수씨 장례식

화장을 마친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의 유골을 경찰이 빼앗아 빼돌리고 고속도로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점거시위를 벌였다.

19일 오후5시30분경 광주 북구 청옥파출소 앞의 물게이트 앞 호남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노동자와 학생 4백여명은 약 1시간 후 자진해산했다. 이 시위에 참가한 김아무개(30)씨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물게이트를 봉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위를 벌인 노동자와 학생들을 색출, 검거하기로 했다.

한편, 양씨의 유해는 경찰이 철통같이 에워싼 상태에서 이날 오후7시50분경, 영산강 하구 언덕에서 유가족에 의해 강에 뿌려졌다.

노총, ILO 총회서 국익 핑계삼아 거짓말 재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

한국노총이 제8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배후한 자료가 민주노총등 국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 총회 중 위원장의 명의로 "몇몇 사업장에서는 법질차를 따르지 않는 파업으로 정부에 탄압의 구실을 줌으로써 노조운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3인, 민주노총(준))은 20일 한국노총으로 보내는 공개요구서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명의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배포된 내용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총위원장의 공개 사과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 사태의 진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준)은 23일 12시 한국노총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지며 '양봉수동지 정신계승 현장실천 투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자료를 배포한 경위에 대해 "진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국익보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자료를 배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통노조, 언론중재위에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은 김영삼 대

령의 국가전복음모 발언과 박홍총장의 북한사주발언에 대해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사통계국장 정해자씨는 "중앙일보, KBS, SBS등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없이 내보냈다"고 정정보도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는 박홍총장의 해명발언에 대해 "박홍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가능한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노조의 구속수배자 가족들도 19일 박홍총장실로 찾아가 면담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서강대총학생회도 20일, '박홍총장 망언규탄과 사과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박홍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

16일 박홍총장의 해명 발언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홍총장은 "한국통신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16일 "강연의 내용과 의미가 확대해석돼 잘못 전달됐다"고 하는 엇갈린 발언을 했다.

이에 한림대에서 박홍총장의 발언을 직접 취재한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는 "박홍총장의 해명은 형식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누가 그런 말을 민졌느냐. 녹취테이프가 있으니 직접 대질 심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림대총학생회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림과학원에 대해 녹음테이프 공개를 요청했으나 한림과학원은 "어차피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니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 해고에서 장례까지>

<2월20일> 현대자동차 노조대의원(의장2부)인 양봉수씨 해고, 회사가 노조와 의논없이 신차 마르샤 라인을 추가시키려 하자 항의하여 라인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 이유임. 회사는 이후 양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현대자동차 단체협상안에는 노동조건의 변화시에는 반드시 노조와 협상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3월29일> 의정부 사무실에서 회사와 노조가 신차 라인 추가문제를 협상, 이를 안 양씨가 참석하려 하자 경비 20여명이 집단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처를 입음.

<5월12일> 오후4시30분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양봉수씨 분신(전신 75% 3도 화상), 노조 공동소위원회에 참가하려는 양씨를 "해고자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며 회사경비들이 집단폭행한 것이 발단임. 양씨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 입원. 현대자동차 노동자 1천5백여명 항의농성 '양봉수동지 분신대책위원회' 구성.

<5월13일> 승용차 1,2부 부분파업 돌입, '울산해고노동자협회',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텐트 농성 시작

<5월15일> 제3,4공장까지 파업확산, 밤샘 텐트농성 시작

<5월16일> 회사측 분신대책위 위원장등 1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분신대책위 주축로 1만5천여명 모여 규탄집회. 민주노총(준) 서울 현대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5월19일> 새벽, 현대자동차에 경찰병력 투입, 텐트 농성중인 노동자들 전원 연행. 이때 노조 집행부들이 회사관리자들과 함께 주동자들을 찾아나서 노조원들의 비난을 삼. 이날 밤늦도록 현충원 소속 노동자 항의시위.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노동자 13명 구속, 12명 수배됨

<6월13일> 양봉수씨 사망. 양씨는 병상에서 투병중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살고 싶다. 현자 조합원을 사랑한다. 노동조합을 사랑한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함.

<6월14일> 유가족과 현충원 대표단이 노동자장을 결정하고, 양씨의 명예회복과 해고자 복직등을 요구, 노동자들 병원 영안실에서 추모집회 매일 갖기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매일 추모집회.

<6월15일> 현충원 대표, 현대 본사 항의방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축로 양씨 추모기도회 가져

<6월17일> 서울, 울산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양씨 추모집회 열려

<6월19일> 양씨 유가족, 가족장으로 치루기로 회사측과 합의. 대구화장터에서 양씨 화장 후 장지인양산 솔밭산 공원묘지로 향하려 하자 경찰이 유골을 탈취, 유가족과 함께 빼돌림.

오후5시30분경, 광주 호남고속도로 청옥동 물게이트에서 노동자, 학생 4백여명 항의시위

오후7시50분경, 양씨의 유골 영산강 하구 언덕에서 강에 뿌려짐

오후5시30분, 울산 현충원, 일산해수욕장에서 노동자 3천여명 추모집회.

인 / 권 / 어 / 록

△ 성역이 없는 사회

우리나라 독재권력은 지금까지 많은 성역을 유린해 왔다. 이승만은 한국 최초의 '헌법'을 유린하고 발표명령으로 '국민의 생명 수호'란 성역을 무너뜨렸다. 박정희 유신통치는 대학에 체포조를 상주시켜 '지성의 상아탑'이란 성역을 유린했다. 전두환군부는 시민 학살로 '국민의 군대'란 성역을 무너뜨렸다. 김영삼 정부는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의 경찰력 투입으로 '종교 성역'을 짓밟았다. (중략)

성역이 없는 사회는 불행하다. 갈 때까지 다간 절망의 사회다. 자식에게 성역이 무너지면 폐륜이 된다. 그래서 부모를 죽일 수도 있게 된다. "말세로구나!" 하는 말은 '성역이 무너졌다'는 의미이다. '미국' '미군범죄' '개발연론의 폭력', 진정 무너뜨려야 할 성역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이 시대 마지막 땅을 이렇게도 짓밟는 불행 앞에 우리는 분노한다. 명동성당과 사찰은 한국통신 노동자가 아니라 훗날 대통령 자신의 피신공간 일런지 누가 알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발행 <빛트레> 95년6월 16일자, 박기호 신부의 글중에서

<근 조>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박삼훈씨, "사용자 각성" 유서 남기고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씨의 분신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노동자가 분신하였다. 경남 거제도 옥포 대우조선에서 40대 노동자가 회사측의 노조탄압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사망하였다.

21일 낮 12시15분경 이 회사 특수선 생산1부 노동자 박삼훈(41)씨가 특수선 생산부 4층 옥상에서 몸을 신너를 끼었고 불을 붙인 후 투신했다. 이를 본 동료 노동자들이 박씨를 급히 대우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낮 12시 58분경 사망하였다.

박씨는 유서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사용자의 각성을 주장했다(아래 유서전문).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백순환)은 사건 발생 직후 즉각 '박삼훈열사 분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날 오후6시 박씨의 시신이 안치된 대우 옥포병원에서 추모집회를 가졌다.

또,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모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설정하고, 조문대표단을 대우조선노조로 파견,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대우조선노조측은 "박씨의 죽음은 그동안 회사가 신경영전략의 미명아래 현장의 노동통제와 노동강도를 강화하면서 노동조합의 집회 참석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갖은 노동탄압을 자행해온데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일까지 20차 걸쳐서 임투교섭을 해왔으나, 회사측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 유 서 >

이놈의 세상, 가진 자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 근로자는 작은 월급으로 늘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노동자여!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록하면 집회 참석도 못하게 하고,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누가 찾습니까? 노동자여,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울 임금 100%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여 각성하라 앞서간 노동열사 뒤를 따라갑니다. 노동형태 여러분 올해 목적을 기필코 승리하기 바랍니다.

박 삼 훈

14일 열린 노조원 총회에 서 참석자의 94.6%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였다.

박씨는 지난 81년에 대우조선에 입사하였고,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대우조선에서는 87년 이석규씨가 최루탄에 맞아 희생되었고, 89년에는 이상모, 박진석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하였다.

한편 전국연합은 21일 대우그룹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강대생 81%, "박흥발언 근거없다"

총학생회 설문조사, 대부분 학생 한통노조 지지

'서강대 총학생회'(회장 신성필, 사학4년)는 14일 박흥 총장의 한국통신노조 관련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서강대 학생 대부분이 '박총장의 발언에 근거가 없으며, 한국통신노조의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통신시장 개방등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15,16일 이틀 동안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해 21일 1차 집계(총 2백20명 응답)한 바에 따르면, 박총장의 발언에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명(4.5%)에 불과했고, '근거가 없다'고 답한 수는 1백80명(81%)이었다. 박총장의 발언이 '한통노조 간부들의 대량 검거로 6.27 지자재 선거에서 공안정국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백24명(56%), 이에 반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는 65명(29%)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항목인 '한국통신

노조의 주장이 타당하다'에 답한 수는 1백79명이었고, '한국통신노조의 주장은 타당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에 응답한 수는 74명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학생들은 박총장의 발언으로 서강대공동체의 파괴에 일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총학생회는 21일 오후3시 교내 소운동장에서 '한국통신노조 사태에 대한 박흥총장 망언 규탄과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2학기 개강과 함께 박흥총장 불신임 투표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총장 불신임 투표를 전개해 나가는 한편 예수회에 대해서도 총장 탄핵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 1백50여명은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 국제 인권 소식 ●

앰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세계 여성들의 인권침해 개선과 권리신장을 위해 3월8일부터 9월말까지 전세계 1백48만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 앰네스티 회원들은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요청하는 유엔탄원서를 국제여성보호센터(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등으로 제출하고 각 정부가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15가지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앰네스티는 각국의 정부들에게 모든 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정책입안과 재정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약 1백만여명의 국내 유민이 있으며 약 80%가 여성들이거나 피부양 어린이들이므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81년과 93년 사이 전세계 난민의 수는 8백만에서 2천만으로 두배이상 늘어났다. 이중 난민의 80%이상은 여성과 어린이들로 특히, 여성 난민들은 보안군이나 강도, 때로는 다른 난민들로부터 강간, 살해, 고문을 당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보호를 위한 15가지 조치

- 모든 정부는
- 1. 여성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해야 한다.
- 3. 여성의 인권을 제한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
- 4. 무장 충돌시 여성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5. 정부기관원이나 준군사조직에 의한 강간, 성추행 및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라.
- 7. 가족관계로 인한 처벌을 중지하라.
- 8. 구금중인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11. 난민, 유민 및 망명희망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라.
- 14. 공식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장려하라.
- 15. 모든 무장반대집단 또한 최우선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라.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로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전국의 사제들 단식농성 확대

"국민적 화해와 일치를 위해 차후 행동을 유보한다"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옥균 주교)의 20일 2차 시국미사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국 6개 교구 사제들은 단식농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 청주, 부산 등 전국 6개 교구 70여명의 사제들은 20일 '전국 사제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현로 신부, 시국대책위)를 만들고 19, 21일을 전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교구 젊은 사제 모임'은 20일 '신부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2차 시국미사의 성명서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신이 지켜야 할 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지방교구가 교권유린 사태를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 국한된 일로 여기지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시국기도회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교구의 입장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반목과 대사회문제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에 충실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속죄의 의미에서 단식기도를 하며 스대통령의 공개 사과 △한 대통령위해는 매일 오후 8시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20일 제2차 시국기도회를 마치고 명동일대를 침묵행진하려다 경찰의 방패로 머리가 찢기는 부상을 당한 이종근씨는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 박창희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그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박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며 양심수 선정 사유를 밝혔다. (AL INDEX:ASA 25/13/95) 박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제우기와 구타, 협박 등 고문을 받아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면회하러간 딸조차 2시간동안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허위자백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주 농민의원 7월15일 개원

'나주농민건강사업회'(회장 한금동, 나건사)는 20일로 예정되었던 전남 나주시 이창동의 '농민의원'과 '농민치과의원' 개원을 '나주농민회'의 지자계 선거 활동 관계로 7월 15일로 연기했다. 나건사는 조선대 의대와 약대, 전남대 치대 출신의 젊은 의료인들이 결성한 의료단체로 지난 8년동안 나주시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해왔다. 또, 이들 의료인들은 5년 전부터 '농민약국'을 운영해왔다.

<근 조>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 상식 어긋난 판결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
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
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소송에서 법원은 검
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
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
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박효열부장판
사)는 박충렬(35)씨가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등에
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
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
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
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
소송을 기각했다.

향소할 예정이다.
박씨등은 지난 86년 10월
이른바 '반제동맹당' 사건으
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등에게
고문당해 지난 89년 1월 수
사관 12명을 검찰에 고소했
으나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
켜 93년 11월30일 공소시효
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
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등, 정
대협)은 22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일본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
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
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
지 않겠다는 것이며, 옹당
저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
의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
세라고 비난했다(<인권하
루소식> 6월16일자 참조).
이어 정대협은 "일본 중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진
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
적 책임이행을 강력히 요구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등, 정
대협)은 22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일본정부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
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
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
지 않겠다는 것이며, 옹당
저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
의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
세라고 비난했다(<인권하
루소식> 6월16일자 참조).
이어 정대협은 "일본 중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진
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
적 책임이행을 강력히 요구
할 것"을 촉구했다.

대우조선 노조 전업거부 노동계, 박씨분신 성명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장 백순환, 대우조선노조)
은 2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조원 약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사정신계승, 노동
단합분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대우조선노
조는 △노무관련 책임자 처
벌 △직방장 노무관리 금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대
표이사의 공개사과 △95년
단체협상 성실교섭에 입할
것 등을 회사측에 요구했
다. 대우조선 노조는 21일
저녁시간에도 집회를 가졌
고, 22일 저녁에도 대우명
원 앞에서 잔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가졌다. 또, 「대우그
룹노동조합총협의회」(대노
협)은 23일 조문단을 파견
하고 대노협 차원의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의 분신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조선업종노
동조합협의회」(조선노협)는
22일, "대우조선은 회사가
노동자들을 피말리는 경쟁
과 노동강도 강화로 몰아넣
는 한편, 직방장 등 관리라

인을 총동원하여 감시와 협
박을 동원한 노동통제로 옥
죄면서 노동자들을 꼼짝 못
하게 해 온 이른바 '신경영
전략의 모범 사업장'으로 알
려져 왔다"며 "대우조선 무
분규 4년 신화"는 이런 강력
한 노동통제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노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회사측에
대해 △비인간적인 신경영전
략의 중단 △노동조합에 대
한 간섭과 탄압 즉시 중단
△박삼훈씨 죽음에 대한 사
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합
준비위원회」와 「민중정치연
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
한 일체의 탄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등을 주장했다.

양봉수씨 유골 탈취 비난 불교인권단체 성명

「대구 자비원」 「승려인권
문제연구소」등 9개 불교단
체들은 22일 현대자동차 양
봉수씨 유골탈취에 대해 성
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영
삼 정권의 유골탈취 사건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까지 상
실한 것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
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노동법

강사: 김선수(변호사)

일시: 6월2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대
해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가
졌다.

지난달 10일 서울지역 초중
고 교사 100인의 이름으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
울교사 100인 선언'을 발표
한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개
혁선언 서울교사모임」(교사
모임)은 21일 오후7시 기동
교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이
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들은 모두 현직 교
사들로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종합생활기록부' '학
교운영위원회' '자립형 사립
고'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
론했다.

김민곤(서울사대부고 교
사)씨는 "정부가 발표한 교
육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개
혁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사안과 실현가
능성은 불투명하다"며 "교
육환경개선, 교원처우개선
등 학교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개혁안의 제시를 위해
교사들이 참가하는 지역단
위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해
발제를 한 김재석(덕수상고
교사)씨는 "담임교사 한명
이 5,60명 학생들을 담당하
고 있는 실정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을 정확히 평가해야 하는
종합생활기록부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안의 현실화를 위해서
는 한 학급당 인원수를 30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
안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내에 학사행정전
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사행
정을 전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모임이 지난 12
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
교사 3천명에게 조사한 '정
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
의견'에 따르면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 38%, 부
정 34%로 나타났으나 종합
생활기록부의 학교교육 정
상화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
는 응답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
고 할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
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
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안법 선고 또 연기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택)는 한
백렬씨등 출소장기수 29명
이 낸 손해소송 1심 선고공
판을 다시 7월20일로 연기
했다.

○ 행사안내 ○

-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행위 규탄 항의집회
· 일시:6월23일(금) 낮12시30분/· 장소:여의도 한국노총앞
· 주최:민주노총준비위원회(☎ 765-2010)
- 주제강연-「나의 삶, 우리의 길」: 감사-신영복씨
· 일시:6월23일(금) 오후7시/· 장소:홍사단 3층강당
· 주최:청년정보문화센터(☎ 516-1542)
- 택시노동자 석광수 열사 4주기 추모식
· 일시:6월23일(금) 오후2시/· 장소:마석모란공원
-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미군범죄 항의시위
· 서명운동-서울역광장(23, 24일오후2시)
· 항의시위-용산 미군기지(오후5시)
· 주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744-1211)
- 6월항쟁 최루탄 희생자 고 이태준 7주기 추모식
· 일시:6월24일(토) 오후1시/· 장소:부산 동아대
- 참여연대 열린법정-박해받는 내부고발자, 해인원 정
광웅 절도죄 사건
· 일시:6월29일(목) 오후 5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796-8364)
· 내용:사건의 개요설명/해인원의 실태와 노동조합/내부고
발 보호의 중요성
-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 간사·자원봉사자 수련회
· 일시:7월1일(토)-2(일)/· 장소:대성리 남사당
· 주최:외국인노동자공대위(☎ 765-2010 윤우현)

◆ 동 정 ◆

□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상근자들이 7
월1,2일 경기도 가평 두밀리로 MT를 간다. 7월1일 오후
4시30분 청량리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참가할 자문위원
들은 오는 26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신청하면 된
다.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전국기관
차별의회」 의장 서선원,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김연환씨와 한국통신 노조간부등 구속 노동자들에게 경
전과 영치금,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전화 734-6401.

<영치금 보낼 곳>

제일은행 128-20-303720 예금주: 박용모.

<편지 보낼 곳>(번호는 수번)

· 안양교도소:430-080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58
서선원 2614번, 김연환 1914번

· 서울구치소:(437-120)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8-11
양한용 107번, 박철건 140번, 김재연 97번, 김성용 35번,
김형배 178번, 김태진 143번, 윤상학 125번, 오용철 52번,
김용광 77번

· 성동구치소:(134-160)서울시 송파구 가락 2동 162
김세욱 4302번, 박수호 43번, 도남희 40번, 이재숙 4301번.
· 영등포구치소:(152-080)서울시 구로구 교척동 1-102
정홍근 3422번, 박충범 3408번, 정용철 3404번, 장현일
3424번, 이정환 3405번, 신철석 3420번.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근 조>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강제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저유용량 1백58만 드럼의 국내 최대 저유소(기름저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선거 후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할 가능성마저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 2백40세대 1천여명은 건설부가 94년 8월16일 대장동 산41-1, 석운동 7-7 번지 일대(면적 약27만5천평)를 '서울남부저유소'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마을주민 이병현(32), 이종국(32)씨가 업무방해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16일 '서울남부저유소' 반대 대책본부, 김영순(54)본부장이 구속되었다. 29일 현재 김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물도 끊은 채 9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대장동 지역에는 입산용역회사 철거반원 1백50여명이 동원되어 주민들과 대치중이다. 지난 5월부터 철거반원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7만평의 녹지를 파헤쳐 놓았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로 주민 신갑근(53)씨 등 7명은 부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반원들은 노인들을 내동댕이치거나 팔을 끼고 얼굴을 아스팔트에 짓이

기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벌목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서울 재개발 지역에 동원된 '철거강제'로도 유명하다. 주민들이 용역반원들의 행패를 성남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이고 오히려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구속시켰다.

보존녹지지역에 기름 저장소 공사 강행

처음부터 대장동이 저유소 대지로 지정고시된 것은 아니었다. 건설부가 91년 7월 성남시 금토동과 92년 3월 갈현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금토동과 갈현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법률상 저유소 등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94년 3월 건설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존녹지지역인 대장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관한 결정기준)를 개정했다. 제74조 1항에 '보존녹지지역'이란 단어를 첨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자인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이철홍)가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존녹지 지역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로비를 통해 해당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사실이 처음 폭로된 것은 94년 4월 13일 성남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이근영 의원에 의해서다. 즉각 주민들과 의원들은 반대운동을 벌였고, 94년 7월 급기야 저유소측과 주민들 사이에 인분투척사건이 발생해 주민 11명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94년 8월 건설부는 대장동 일대를 저유소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는 "문민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생태계 파괴 우려, 주민들 전면백지화 요구 주민들은 대장동 산41-1번지 일대가 저유소 대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수원의 광고산과 과천의 청계산 자락을 잇는 7등급 산림으로 대부분 청정지역이고 1급수 지역으로 저유소가 설치되면 녹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

이 주민 대부분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 저유소 설치법이 없기 때문에 저유소법을 적용한 범규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저유소로부터 3백m 앞에 15.4만kw, 34.5kw의 전력이 있는 데다 76.5kw 신성남전력소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쇄사고로 이어질 위험부담마저 따른다. 특히 LG건설이 시공업자이지만 공사의 65% 가량이 하청업체에 맡겨져 부실공사 또한 염려된다.

주민들은 현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저유소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처>대책본부 0342-49-1822/ 41-7730 안홍택 목사 0331-283-5522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씨가 내일 방한한다.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씨는 4박5일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차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마지막회)

노동소송과 노동법의 개정방향

강사: 김선수(변호사)

일시: 6월2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위원장 권영길 등 3명,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등 1백여명은 23일 오전12시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사태 왜곡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한국노총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노총이 ILO총회의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한 자료 중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인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성과 사과를 커녕 민주노총의 ILO참가를 왜곡, 협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요구서에서 △6월8일 노사정 만찬의 진상 △자료배포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문건의 자료입수경위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ILO에 배포한 '진상자료'는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국익보호와 국내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영문번역에서 단어선택의 잘못으로 일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그간 한국통신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량 구속·수배가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ILO에서 배포한 자료와 모순되고 있다.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지난해 여름 신공안정국에서 일어난 정선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정진상(36, 경시대 사회학과)교수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했다.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방법은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으로 책에도 서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폭력 혁명을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운동에 의해서 사회는 변화발전된다. 「한국사회의 이해」 어느 곳에서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상환(44, 경제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있을 예정이었다. 다음 재판은 7월20일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 전남대생 8명

22일 오후5시부터 전남대생 1백50여명이 우산동 일대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민자당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거리홍보전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생 28명이 연행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남대생 5백여명은 이날 3시간 동안 무등도서관 앞에서 격렬하게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연행된 학생들 중 김명선(18, 회계학과 1년)씨 등 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철홍(21, 지리학과 4년)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할 방침이다.

◆인권간행물◆

- 『함께걸음』 5/6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주요내용: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장애우통합교육의 과제와 대책/등교거부로 이어진 제천 청암학교 사태/순환보직제 이해서 안된다 등. 85쪽. 2천원
- 『전국연합통신』 56호-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언론의 용공음해 작전/지방자치선거 중간점검과 전망/예고되는 정권의 탄압, 그리고 노동전열의 대응/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국회청원서명 취지문 등. 56쪽.
- 자료집: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교육개혁선언 서문 교사모임(☎ 675-6181) · 주요내용: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중합생활기록부 제도/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의견조사결과 등. 29쪽.
- 『쉬운법 재미있는 세상: 아빠, 법이 뭐예요?』(창비아 등문고) · 주요내용:법 나라와 도덕 나라-사회규범과 법/내 말이 곧 법이니라-법의 역사/나는 일이 필요해-일과 법/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소비자의 권리 등. (우리누리 지음/창작과 비평사 펴냄/4천원/235쪽)
- 자료집:사법 1백년의 반성과 사법개혁의 과제-민변, 참여연대(☎ 796-8364) · 주요내용:사법제도 1백년의 반성(박흥규)/우리 사법제도의 과제(차병직) 등. 21쪽.
- 『병원노동자신문』 48호-전국병원노련(☎ 777-1750) · 주요내용:6월 총력투쟁 달아오른다/사회개혁투쟁 2연패/병원노련이 지정한 올해 악성병원-순천중앙병원, 울지병원, 계요병원, 메리놀병원/95 투쟁 상황판 등.

<근 조>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엔, 최초 국내 인권조사 목적 방한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싸인씨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비브 후싸인(Abid Hussain)씨는 25일 입국하여 현재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민간단체는 전망하고 있다.

인권협동 국내 인권단체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인권을 유엔이 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 정부는 90년 유엔인권조약에 가입한 이

후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후싸인씨는 26일 민주노동(준)과 김선수 변호사(민변)를 만났고 27일 전교조 정책추진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들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45년째 복역)씨와 작가 황석영씨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인권협과 가진 면담에서 후싸인씨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이 개선된 점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 제3차 개입금지등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인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8-30일까지 정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기자회견 등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고 30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우노조 본사 텐트농성 박삼훈씨 분신 대책 관련

지난 21일 분신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씨의 추모집회를 회사측이 방해할 뿐 아니라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측은 박씨의 분신 이후 관련 기자들에게 "박삼훈씨가 빚이 많아서 자살을 한 것이다. 가정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유가족들이 노조와 짜고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농협과 회사에서 주택융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 있으나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200평의 토지중 80평을 팔아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으며 가정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분노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백순환)은 회사의 이러한 작태가 "회사는 각성하라"던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삼훈 열사 분신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5시 거제 옥포메리지에서 조합원과 조합원가족등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삼훈씨를 추모하는 '열사정신 계승 조합원 총단결 전진대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회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호소한 박씨의 뜻을 계승, 95민주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회사측은 추모집회 참가를 위해 잔업을 거부, 5시 정시퇴근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퇴근사유가 무엇이냐" "정시퇴근은 준법투쟁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집회참가를 저지했다.

대우조선노조 간부 10여명은 회사가 계속 서로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대화를 미루고 있어 박삼훈씨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김우중 회장과 담판을 짓기 위해 27일 서울로 상경, 대우본사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위원장 및 수도권 회원노조 상근자들도 29일 오전12시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공판 안내

- 6월28일
최승기,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 6월29일
성명규의 2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조두현(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 6월30일
김병득,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1부 418호
신광수,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1부 418호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로!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흐름

(6월19일-6월25일)

<19일>

한국통신노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면담 조작간첩 사건 수감자 집견허용 촉구/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스피노사 수감/시민단체 대표들, 6·27생활자치 선언/국제엠네스티, 박창희교수 비인도적인 대우조사 촉구/천주교 서울대교구 시국대책위원회, 이흥구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전국사제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신부 70여명 단식농성 시작/노동인권대책위, 김영삼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 국회 제출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제 실시로 근로자 해고 요건 완화추진/사전영장이 발부된 현충원 윤재건 의장 자진 출두 구속/미국법원, 팀스피리트 훈련 어민피해 19만여달러 배상 판결/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씨 사용자 각성을 요구하며 분신/인권교구 사제, 신도 2천여명 시국미사 가져/서강대 총학생회, 박홍총장 설문조사 발표/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 모임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토론회 가져

<22일>

조계종 중앙종회, 정부사과 촉구/천주교부산교구 오창렬 신부등 사제 36명 가톨릭센터에서 단식농성/한국사회의 이해 2차재판/민자당 반대운동한 전남대생 8명 구속/법원, 박충렬씨 검찰의 직무유기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손배소송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외외교 비난

<23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법국민연대회의', 의료보험 통합요구/공선협, 기관-무효방지 캠페인 나서/서울시 교육청, 97학년부터 일선교과 실업고에 장애 특수반 설치/천주교부산교구 사제신자 3백여명 '현정권의 회개를 위한 시국미사' 가져/천주교청주교구 정진석 주교, 사제서품식에서 명동성당에 대한 경찰력 투입 강력 비판/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동기공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집회/국제금속노련, 한국노총의 왜곡발언 반박 입장 발표

<24일>

노동부 46개노동자방사사무소에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촉구/북한, 일본국회의 종전50주년 결의안 비난/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5백여명 종로서시위

<25일>

유엔환경 서명 50주년 기념일/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방한

<해설>

지자체 선거로 뜨거웠던 지난주에 다시 대우조선의 박삼훈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대자동차 양봉수씨의 유골을 경찰이 탈취한 데 이어 일어난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세계화와 신경영전략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마저 부정되는 상황은 분명 문제다. 이번 방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제3차 개입금지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된다. 다시금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받게될 처지에 있는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선언이 국내 최초로 제기되었다. 「한국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공동대표 서동진등, 동성애자인권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서동진씨는 "이번 협회 결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실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협회는 이날

발족선언문에서 △동성애자 인격적 모욕과 비난 중지 △모든 의학·법률·교육적 관행의 중단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언론의 보도관행 각성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 제공을 촉구했다.

동성애자인권협회는 69년 6월27일 미국 동성애자들이 세계 최초로 이들의 권리선장을 위해 투쟁했던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여 6월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의 인권주간'으로 선포, 소식지발간과 국제조직가입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고,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무런 제한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사상, 의견을 담화, 토론, 강연, 방송 등의 구두의 형식이나 문서, 도서, 사진 등의 출판물, 예술공연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복합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차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통제와 간섭, 취재권/ 정기간행물 등록 및 사후납본제도/ 집회신고 및 금지통고 등이다.

<근 조>

오늘은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열사의
장례일입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오늘 대우조선 고 박삼훈씨 장례

'전국노동자장'으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백순환)은 지난 21일 분신 사망한 박삼훈(41)씨의 장례식을 29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유가족들에게 위임받고 지난 27일 회사측과 장례식문제를 협상해 고 박삼훈씨의 장례식을 29일 '민주노동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장례식 외에도 △모든 장례비용 회사가 부담하며 △29일 오전 8시-10시까지 전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갖고 △회사의 사과 및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들에게 이후 생계대책을 위한 충분한 보상을 할 것 등을 결정했다. 또한 장례

기간에 있을 모든 행사 및 30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있을 '95단체교섭정의행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조선노동조합'이 주관하며 '조선노동조합협의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금속연대회의', '영남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유가협'이 후원한다.

고 박삼훈씨의 장지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고인의 고향인 경북 영덕으로 결정되었고, 장례절차는 29일 오전 6시 대우병원에서 발인하여 8시 대우조선 내 선각식당 앞에서 영결식을 갖고 10시에 장지로 출발한다. 한편, 7월1일에는 전국 각 지역별로 '박삼훈열사 추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장'의 장례위원장으로는 '민주노동준비위'의 대표인 권영길, 양규현, 권용목씨가 맡았고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주관하며 '조선노동조합협의회',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 '금속연대회의', '영남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유가협'이 후원한다.

고 박삼훈씨의 장지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고인의 고향인 경북 영덕으로 결정되었고, 장례절차는 29일 오전 6시 대우병원에서 발인하여 8시 대우조선 내 선각식당 앞에서 영결식을 갖고 10시에 장지로 출발한다. 한편, 7월1일에는 전국 각 지역별로 '박삼훈열사 추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일해왔던 인권단체와 일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고 그간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1-3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일꾼 수련회를 대성리에서 갖는다. 윤우현(민주노동)씨는 "수련회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현실을 정리하고, 전망을 내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실무자, 자원봉사자들이 어우러져 친목을 다지고

상대, 임금체불 상담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출발은 1일 오후 1시 청량리역이다. 문의처 윤우현 765-2010 최정규 844-8896

조작간첩 조사 방안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현치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어제 박용길 장로 방북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74, 사단법인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이사장)씨가 28일 오후 동경에서 북경을 거쳐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8일 주일 한국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남북문제의 큰 걸림돌이 되어 온 조문문제를 푸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결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북한 고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모식에 참가하고, 7월8일까지 평양에 머물 것이라고 문씨는 전했다. 문씨도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방북할 계획이다.

한편, 박씨의 방북에는 제 일평론가 정경모씨가 함께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인권소식

홍콩 여성노동자도 86% 성희롱 경험

「홍콩노동조합연맹」(The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KCTU)은 최근 홍콩 여성노동자 4백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홍콩노동조합연맹은 조사결과를 통해 성희롱이 다양한 종류의 직업형태로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세일즈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92%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는 전행적으로 상사나 직접적인 상급자로 나타났는데, 때때로 동료, 고객, 의뢰인들도 있었다.

피해여성들은 성희롱을 거부할 경우 가해질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도망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폭로했던 33%의 여성들이 작업완성도에 대한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사직압력, 감봉, 부당한 해고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 국제엠네스티, 중국정부에

국제엠네스티는 28일 「중국의 여성 - 여정치범의 수감 및 인권남용」이란 보고서를 발표, "여성수인에 대한 고문·강간 등을 중단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중국 정부에게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보고서 통해 오는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중국의 여성 인권남용문제

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 밝히고, 전세계 여성대표 4만 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중국의 여성인권 남용 문제를 대충 일버무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 여성 죄수들이 경찰이나 교도관들에게 때 때로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당국이 시사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여성 죄수들은 교도관들에 의한 길들이기 또는 성

고문, 강간 등 심각한 위급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중국이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정부가 "고문 및 이로 인한 수감자 사망사례 등을 철저히 고도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노조 간부 4명 연행

서울경찰청은 27일 한국통신 노조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유방상(37)씨, 중앙조직2국장 박호(32)씨, 서울지방본부 조직홍보부장 신규식(34)씨, 경기지부 조직국장 조계길(32)씨 등 4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30분 경 강북구 우이동 통일연수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써 사전구속영장 또는 긴급구속장이 발부돼 검경의 수배를 받아왔던 노조 간부 42명중 34명이 검거되었고, 유력상 노조위원장등 8명이 현재 수배중에 있다.

한편, 한국통신 노조는 박홍 서장대 총장을 고발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노련연맹교섭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지난 24일, 목포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대현, 대노련) 간부들이 이 학교의 간부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대노련은 지난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국립대 노조 7개 대학중 목포대학이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동교섭대표단 6명을 파견한 것이다. 대표단 6명이 본부건물 복도를 지나던 중 김현승 교수를 비롯한 20여명이 이들을 에워싸고 "당신들이 뭘데 남의 학교에 와서 활보하나" "당신들 공산당이냐" 등의 폭언과 사대질을 했다. 또한,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던 대노련 간부들에게 정윤범 재무계장이 복도에 놓인 모래가 채워진 항아리를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떨어뜨려 대노련 대표단 중 김연태(군산대 노조위원장)씨 등 2명이 머리, 가슴 등을 다쳤다.

이 사건이 있는 뒤 류대현 대노련 위원장은 목포대를 방문하여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등을 요구했으며, 목포대와 서울의 대노련 사무실에서는 24일 이후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대학 당국은 국립대 공동교섭이 진행중임에도 노조의 합법적인 쟁

의행위에 대해 불법쟁취행위를 중지할 것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목포대 노조 공동투쟁본부장 강승주씨를 향해 총무과 기진서씨는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노련은 오늘 오후 2시 목포대학교 본관 앞에서 '연맹 지도부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학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목포대학 당국의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포항지역의 해동산업 영업계장 서정길(30)씨는 지난 19일 노조위원장을 죽이겠다며 삽자루를 들고 조합사무실을 때려부수는 난동을 부렸다. 또한, 21일 오후4시경 한국타이어 이승우 인력관리부장등 구사대는 불법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타이어 노조 대의원 9명이 시한부 농성중인 노조사무실 문을 망치로 부수고 가스총을 쏘며 난입하려 시도하는 일이 있는 등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준)은 28일 목포대학 폭언·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목포대학 당국의 조속히 공개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준)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학노련과 연대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일시: 6월29일 (목) 오후6-8시 / 장소: 종로성당
- 주최: 민가협(전화: 763-2606), 민주노동(준), 언노련
- 후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제>

-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김중서 교수, 배계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차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 정태춘, 가수·작곡·작사가
4.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하여 --- 정진상 교수, 경상대

<초청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Abid Hussain)

삼백백화점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과,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재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내렸다(발제문 요약 2-3면).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 제도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 개입금지과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 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 규정의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준석(언론권 정채

실장)씨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언론의 상황에 대해 "아직도 안기부내 언론감시팀이 존재하고 40여 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새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춘(가수, 작사·작곡가)도 "사전심의라는 것은 한

마디로 사전검열제도로서 우리시대의 작가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들은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의를

고 박삼훈열사 장례식 열려

대우조선, 조합원 참석 방해하기도

지난 21일 회사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분신 사망한 박삼훈(41)씨의 장례식이 사망 9일만인 29일 경남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노동자장으로 치뤄졌다.

이날 장례식은 오전 6시 운구행렬이 대우병원을 출발, 대우조선 북문과 그가 14년간 일해온 특수선 건물 앞을 거쳐 서문앞에 도착, 조합원과 각계인사 등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결식이 갖고 10시경 장지인 경북 영덕으로 향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백순환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열사의 죽음은 회사의 노동통제와 노조탄압 때문인데도 회사는 반성하기는 커녕, 신경영전략으로 노동수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다"며 "30일 쟁의발생결의 찬반투표를 통해 열사가 바란 조합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가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도 참석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아비브 후싸인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계기로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11쪽의 보고서를 작성 후싸인 씨에게 전달했다. 엠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지적했다.

목포대노조 결의대회

'전국대노동조합연맹' (대노련)소속 조합원 5백여명은 29일 오후 2시 목포대학교 본관 앞에서, '대노련 지도부 폭행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목포대측이 지난 24일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대노련 교섭대표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은 1만 대노련 조합원을 모독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개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후 이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지방출장을 핑계로 면담을 거부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로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 내용

(1) 의견을 가질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거나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의견이란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에서만 나온다.

(2) 표현의 자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은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에는 본인이나 선택하는 구두, 필기, 인쇄 등 전달수단으로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사상의 자유가 의견을 가질 권리의 필요조건이라면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의 충분조건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란 궁극적으로 반정부, 나아가 반체제적인 의사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알권리
알 권리는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수집, 취급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생존이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실을 알

게됨으로써 국민은 그에 대항할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알 권리의 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현행 기밀보호법은 조약에 위반된다.

(4) 조약비준국의 의무
조약당사국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의 절차와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조). 또한 본조약에 인정된 권리가 침해된 행위에 대해 당사국은 효과적인 구제책을 확보하고 사법적인 구제가가능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3.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

국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그와 같은 목적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의 내용은 매우 명확해야 하며, 만일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입법은 조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입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운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분명히 표현의 자유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4.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

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사람들에게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로 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 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소 당국의 가혹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다.

3)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사항, 3개월마다 주요활동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회합 통신 금지, 집회시위장소 출입 금지, 특정한 장소 출석 지시 등을 받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고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이같은 제한들은 어김없이 "국가의 안전"을 앞세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사상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적은 없었다.

(2) 표현의 자유
1) 국가보안법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항과 노동쟁